

2012 총·대선 승리 교육운동 연석회의

# 교 육 정 책 제 안 서

경쟁교육에서 협력교육으로, 차별과 배제에서 돌봄과 지원으로

**‘모두가 행복한 학교혁신’을 위한 총대선 교육의제**

- 복지국가형 교육복지 실현, 혁신학교 확대, 학습환경 개선, 대학체제 개편 -

## 2012 교육운동 연석회의

행복세상을여는교육연대·교육혁명공동행동·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비리사학척결과부패재단복귀저지국민행동·  
전국학생인권연석회의

2012 총·대선 승리 교육운동 연석회의

# 교육정책제안서

## 제안서순서

1. 정책제안서 발간 취지	1
2. 연석회의 출범 선언문	3
3. 분야별 세부 공약 제안 사항 (17개공약, 4개제안)	9
4. 별첨자료 1 통합진보당	57
5. 별첨자료 2 진보신당	79
6. 별첨자료 3 민주통합당	95
7. 토론자료 1	119

[정책제안서 발간 취지]

## **좋은 후보들에게 좋은 정책을 들려줘야 교육이 바뀐다**

**- 유권자와 후보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위하여 -**

2012년 총 · 대선은 한국사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역사적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분단체제로 인한 평화의 위협과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위기로 인한 양극화, 학벌사회와 경쟁교육,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교육양극화와 자살 학생의 증가, 청년실업의 증가 등 생존의 위협에 노출된 국민들은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리더십을 갈망하고 있다.

이번 총 · 대선으로 만들어야 할 새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진보적인 범야권 연대를 견인하는 진보적 정책의제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육운동진영에서는 5.31 신교육체제부터 이명박 정부의 4.15 자율화 조치까지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전면 폐기하는 새로운 진보적 교육체제를 요구한다. 2013의 새로운 교육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고 운영하는 복지국가형 공교육체제를 기본으로 국가의 성장과 모든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교육복지와 일자리와 평생학습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2013 교육체제는 민주주의와 교육복지, 생태와 평화의 가치가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체제이자,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교과부 · 교육청 · 학교의 행정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교육체제이어야 한다. 2013교육체제는 학교에서부터 교육부까지 지역공동체와 국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21세

기에 걸 맞는 국민 참여형 교육행정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학교교육이 경쟁만능과 승자독식의 계층사다리로 감시되고 통제되면서 학생인권 침해와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자살학생, 중도학업포기 학생의 증가로 위기에 빠져있다. 새로운 학교의 모델은 즐겁고 행복한 배움과 돌봄, 인권감수성을 통한 민주적 공동체 생활, 참여와 소통의 공론장으로 되어야 한다.

1. 이러한 현실적 절박함과 시대정신을 담아 우리 교육운동단체들은 이번 총선에서 2013교육체제를 위한 공동의 교육공약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총 · 대선에는 핵심적인 교육의제들이 진보적인 범야권의 다양한 공론화를 통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권자인 국민들의 선택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가진 최대한의 역량이 모아지기를 기원한다. 이러한 제안과 국민적 요구가 새로운 정부의 교육정책 운용에 ‘기준선(guide line)’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2012. 3. 14

**2012 총·대선 승리 교육운동 연석회의**

[연석회의 출범 선언문]

## 교육을 바꿔야 세상이 바뀐다

- 2012 총 대선 승리를 위한  
교육운동 연석회의를 구성하며-

지난 수 십 년간 한국사회를 지배하였던 신자유주의의 폐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며 교육 분야의 경우 그 양상은 더욱 심각하다.

대학서열체제도 모자라 고등학교까지 서열체제를 도입하는가 하며, 경쟁만 강요하는 획일적 평가체제의 확장은 마침내 일제고사의 부활과 교원평가의 전면 실시 그리고 입시몰입교육을 허용하는 교육과정의 개악으로 학교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다. 그 결과 교육 불평등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해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죽어가고 있다.

뿐인가? 80%가 넘는 사립대학의 비율이 말해주듯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실종 된지 오래이다. 그 결과 대학등록금 마련의 고통을 비판하며 자살을 하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사립대학들은 수십조에 달하는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다. 또한 대학 강의의 절반을 담보하는 교수들은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국공립대조차 법인화라는 이름하에 민영화하거나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악하는 방식 등으로 대학에 대한 자본의 지배를 확장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교육의 공공성은 그 흔적조차 남지 않을 것이며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되어 마침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조차 근본적으로 파괴될 형국이다.

2012년 총 · 대선은 한국사회의 앞날에 중요한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며, 신자유주의가 계속 이 사회를 지배할 것인지 아닌지를 둘러싼 일대 격돌이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한국사회의 미래 또한 결정될 것이다.

이에 우리 교육운동진영은 이제까지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교육체제의 근본적인 재편을 주장한다.

우선 우리는 이른바 김영삼 정부의 '5.31 신교육제체'부터 이명박 정부의 '4.15 학교자율화 조치'까지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전면적인 폐기를 요구한다.

다음 우리는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진보적인 교육체제의 상과 경로로 이른바 '2013 교육제체'를 제안한다. 우리가 제안하는 교육체제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교육복지의 실현, 민주주의, 생태, 평화의 가치가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교육, 권위주의이고 관료적인 교과부, 교육청, 학교의 행정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교육을 만들 것이다.

경쟁은 결코 교육의 패러다임이 될 수 없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부모의 사교육비 지불능력이 자녀의 성적과 미래를 결정하는 교육 불평등이 사회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러한 절박함과 시대정신을 담아 우리 교육운동단체들은 공동의 교육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2012년 총 · 대선은 한국교육의 근본적인 재편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바람이 실현되는 정치적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 교육운동단체들이 제출하는 공동의 요구 나아가 국민적 요구가 새로운 정부의 교육정책 운용에 있어 '기준선(guide line)'의 역할하길 기대하는 바이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보편적 권리로 교육복지 실현하라!

교육을 바꾸야 세상이 바뀐다!

2012. 3. 14

**2012 총·대선 승리 교육운동 연석회의**

# [분야별 세부 공약 제안 사항]

## ☞ 정책 기조

- ☐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공교육체제 구축
- ☐ 학교 민주화와 배움과 돌봄의 공교육모델인 혁신학교 확대
- ☐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이 배울 수 있는 혁신적인 학습여건 개선
- ☐ 경쟁과 성과가 아닌 자율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정책 실현
- ☐ 국민(지역공동체)이 참여하는 학교자치, 교육자치, 국가교육위원회 마련
- ☐ 학벌 철폐 및 학습-일자리 연계 직업교육체제, 대학체제 개혁

## ☞ 초중등교육 분야

1. OECD 수준의 혁신적인 학습환경을 구축한다.
2. 교사 1인당 학생수 감축 및 법정정원을 확보한다.
3.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등 학교자치위원회를 법제화한다.
4. 유치원 원장, 학교교장, 교육장 등 선출공모제를 확대한다.
5. 일제고사와 고교입시폐지로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한다.
6. 국·공립 중심의 질 높은 유아교육 시설을 확대한다.
7. 국민 모두가 교육비 걱정 없는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8. 미래형 혁신학교를 확대하여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한다.
9. 입시교육 폐지 및 교육정상화로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감축한다.
10.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와 학교폭력 관련 교육·치유시설을 마련한다.
11. 사립학교의 부패방지 방안을 제도화하겠습니다.

## ☞ 고등교육 및 교육행정 분야

1. 대학서열 체제를 해소하고 지방대학의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2. 사교육 필요 없는 대학입학자격고사체제로 대입제도를 개선한다.
3. 전문대학과 폴리텍 대학을 통합하여 직업교육체제를 마련한다.
4. 대학통합네트워크(공동학위대학)을 구축한다.
5. 대학 구성원과 시민이 참여하는 대학평의회 설치를 강화한다.
6. 고등교육재정 GDP 1% 확보하여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다.
7. 학술학문정책의 질적 도약을 위한 교육연구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8. 대학교의 비정규직교수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한다.
9.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겠습니다.
10.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 공약 01

## OECD 수준의 혁신적인 학습환경 구축 모두에게 행복한 배움과 돌봄의 학교환경을 만들겠습니다.

“2017년까지 OECD 수준의 학급당학생수를 20명으로 감축하고 작은 학교를 살려 혁신적인 학습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 추진배경

- 세계적인 내외의 경제규모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의 학습 환경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 교육 단계별, 기관 유형별 평균 학급당 학생 수 (단위 : 명)

구 분	초등학교 단계			중학교 단계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OECD 평균	21.6	20.8	21.6	23.7	23.2	23.9
EU19 평균	20.3	19.1	19.9	22.2	21.6	22.2
한 국	29.9	30.9	30.0	35.5	34.4	35.3

출처: OECD(2010),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여건이 좋아졌으나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경우 학교 및 학급 간 양극화가 심하고, 특목고와 일반고의 교육여건 격차도 심하다.
- 농산어촌 및 중소도시의 소규모학교의 통폐합보다 소규모 학교를 지원하는 실질적 정책이 필요하다.

### ■ 공약내용

- 2017년까지 거대 과밀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감축 하겠습니다
  - 학급수 감축으로 작은 학교를 지향하고 유휴교실을 창의력 교육시설로 변경(5년 동안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의 50%를 시설 개선, 2014년부터 매년 900개씩 총 4,500개 학교에 혁신학교 전환비용과 같이 학교당 평균 1.2억원 지원)

<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학년당 적정 학급수 및 학급당 적정 학생수(설문조사)

(단위: 개, 명)

학급급	학년당 적정 학급수 평균(빈도, 표준편차)	학급당 적정 학생수 평균(빈도, 표준편차)
초 등	4.8(193, 1.6)	21.3(195, 3.8)
중학교	8.0(207, 5.2)	17.0(216, 0.0)
일반계고	7.1(307, 2.7)	17.0(317, 0.0)
전문계고	7.4(106, 3.4)	19.4(107, 3.5)
전 체	6.8(813, 3.6)	18.3(835, 2.8)

●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살려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지역평생교육센터, 마을학교로 만들겠습니다.

○ 농산어촌 학교 지원 특별법 제정

- 대학입시의 지역균형선발 및 농어촌특별전형 확대 추진
- 농어촌학교의 교육과정운영 자율성 부여
- 교장공모제 전면 실시

○ 교원정원 확보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축

- 농산어촌 학교에 적용되는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수를 도시지역에 비해 차등 우대 적용

○ 농산어촌 학교 교육여건 개선

- 통학버스 의무 운영 및 농어촌학교 기숙사 현대화와 확장
- 농어촌학교 교사 복지시설 확충
- 농어촌학교의 문화예술체육교육활동을 위한 민간, 지역 협력체제 구축

● 신설학교는 학년 당 초등학교 4학급, 중고등학교 8학급으로 상한제를 도입하여 교육적인 규모 기준(500-600명) 마련하여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제도 개선

■ 예산계획 (단위 : 억원)

공약 02

교사 1인당 학생수 감축 및 법정정원 확보  
학습보조 교육일자리를 확대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2015년까지 3년간 총 5만명 이상 정규교원을 채용하고, 사서교사, 상담교사 등 보조교사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추진배경

- 2011년 현재 교사 법정배치정원 대비 교원 충원률은 87.9%(유치원 65.6%, 초등 101.9%, 중등 78.4%)로 중등교사 확보율만 보면 국민의 정부의 84%(2002년), 참여정부의 82%에 비하면 이명박 정부 때는 80%이하로 줄어든 상태이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초·중등교원 배치기준에 의해 산출되는 국·공립학교의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은 2008년 기준으로 88.2%에 불과해 부족한 교원은 4만여 명에 이르고 있음.

<표 9-1> 교육 단계별, 기관 유형별 평균 학급당 학생수(2010년)

(단위 : 명)

구 분	초등학교 단계			중학교 단계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OECD 평균	21.6	20.8	21.6	23.7	23.2	23.9
EU19 평균	20.3	19.1	19.9	22.2	21.6	22.2
한 국	29.9	30.9	30.0	35.5	34.4	35.3

\*출처: OECD(2010),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 공립 특수교사의 현원은 9,460명으로 법정정원 14,652명의 64.5% 수준에 불과함. 따라서 법정정원 확보에 5,000명이 추가로 필요함. 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사 수요는 1만 1천여 명으로 추정되어 총 1만 6천명의 증원이 필요함.
- 비교과전문교사도 법정정원령에 묶여서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4.2%이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배치율은 4.8%, 보건교사는 57.8%, 영양교사는 40.0%가 배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전국 12,000 여개의 학교에 상담교사는 479명, 사서교사는 645명, 학교 사회복지사 600여명, 보건교사는 7,500명, 영양교사 9,000여명)

- 사립학교 신규교사를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국 공립학교도 10%가 넘는 상황에서 영어 수학 강사, 전문상담교사, 학교체육 강화를 위한 스포츠 강사, 사회복지사 등이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음
- 교원 업무 정상화 차원에서 교무업무 보조원이 서울, 경기, 강원 등 일부 교육청에는 전면 배치가 이루어지고 노동조건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법정정원확보와 교육관련 인력의 확충은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커 복지-경제 선순환구조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 ■ 공약내용

- 초중등 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법정정원을 확보하겠습니다.
- 2017년까지 전국 학교에 정규직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특수학교의 법정정원을 확보하겠습니다.
- 학교 사무직원 증가를 통한 교사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추진하겠습니다.

## ■ 법제도 개선

### ■ 예산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초중고 교원 확대	4,742	10,011	11,775	12,497	13,087	52,112
전문인력 배치	870	1,740	2,610	3,480	4,350	13,050
특수교사 추가배치	1,200	2,400	3,600	4,800	4,800	16,800
학교 사무직원 증가	320	640	960	1,280	1,600	4,800
총소요재원	7,132	14,791	18,945	22,057	23,837	86,762

- 학교 사무직원 증가를 통한 교사 행정업무 부담 경감
  - 현재 초중고 약 50,000명의 사무직원을 2017년까지 20%확대(2013년부터 연간 2,000명, 총 10,000명 확대)

## 공약 03

### 참여와 협력에 의한 자율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학교자치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학교자치, 교육자치, 민주적인 교육행정문화를 만들겠습니다.”

#### ■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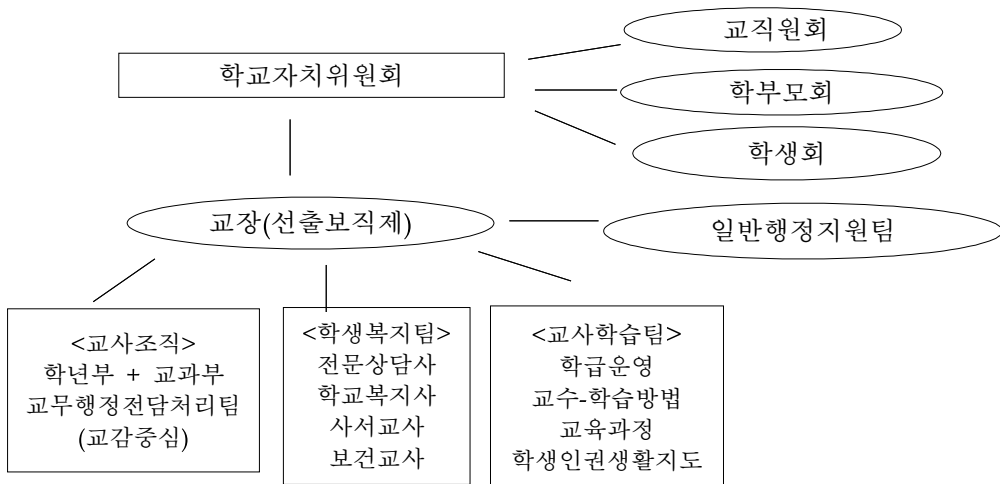
- 교육과 행정의 업무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사가 교육이라는 본연의 업무(교수학습활동, 담임활동)에 집중하기 어렵다.
- 헌법적 권리로서 교육의 자주성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교육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능동적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바꿔야 한다. 학교운영위가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사-학부모-학생들의 주체적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중앙집권적인 통제와 감독체제로 구축되어있는 관치중심의 교육청을 단위학교 및 지역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센터로 전환해야 한다.

#### ■ 공약내용

- 행정업무 위주에서 교육활동(수업, 담임) 위주로 학교업무를 재구조화하고 행정업무전담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 학교자치법을 제정하여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활동을 제도화하겠습니다.
- 지역교육청을 행정감독 중심에서 학교교육활동 및 지역교육지원센터로 만들겠습니다.

#### ■ 법제도 개선

- 학교자치위원회 설치 -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 학교자치위원회 산하 단체의 역할

- 교직원회 - 교육과정, 교원인사, 예·결산, 학사일정, 학교 혁신, 학칙개정 등
- 학부모회 - 학교운영,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감시, 평가, 견제의 역할.
- 학생회 - 학칙제·개정 참여, 학생회 민주적 구성과 운영, 학생복지, 학교자치위원회 참여, 교직원회의 참관 및 의견 개진

● 교육과 연구 중심의 교사 조직

※ 학교 조직의 기본 형태

- 교무행정 전담팀 구성 : 교감 +교무행정 전담 요원
- 조직편제 : 행정중심에서 교육중심으로 (학년부 +교과부)
- 교사학습 공동체 조직 : 공동연구, 공동학습 팀 구성과 지원
- 학생복지 조직 : 전문상담사, 사회(학교)복지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등

■ 예산계획 (단위 : 억원)

## 공약 04

### 자율성·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정책 교사들이 신명나게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교원들이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되고 사회적 기본권이 보장되는 교원우대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 추진배경

- 수직적 승진구조는 일반 평교사의 사기 저하, 과도한 경력평정 비중으로 인한 교장의 임용 제한, 근무성적, 연수성적 평정요소의 타당성 문제, 임용비리 등으로 학교교육 혁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 참정권은 대다수 국민에게 주어져 있는 보편적인 정치적 권리이고, 고등교육에 종사하는 대학교수들에게는 보장되어 있으나 공무원, 교사에게는 그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모순을 안고 있다.
- 경쟁과 승자독식의 서열식 평가제도를 폐지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의 기획력 신장과 전문적인 성장, 창의적인 교육활동, 학교 교육력의 질적 전환을 촉진하는 대안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 내실화보다 평가와 경쟁에 기초한 양성임용정책, 수급과 가산점에 대한 즉흥적 대처, 양성기관에 대한 재정투자 부재 등으로 인해 현재 교원양성, 임용, 수급문제는 내과적 처방으로는 해결될 수 없을 정도로 임계점에 도달해 있다.

#### ■ 공약내용

- 유치원 원장 및 교장 선출, 교육장 임용에서 선출 보직제를 도입하고 내부형 공모제를 전면화하겠습니다.
-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과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학부모, 학생, 교사로부터 배척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도를 폐지하고 교사와 학생간의 협력적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한 진단과 개선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 경쟁서열중심의 학교별 성과급을 포함한 교원성과급 제도를 폐지하고 교원의 연구수당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교육전문직 인사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순환보직제(현장전문교사 장

학위원회)를 도입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교사양성과정 및 자격체제, 임용고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겠습니다.

## ■ 법제도 개선

### ※ 교장선출보직제의 중심 내용

- 교장 자격 : 일정한 교직 경력을 지닌 현직 교사 (교장자격증제 폐지)
- 선출 방식 : 교직원회의에서 복수 추천(교향식) → 교사, 학부모, 학생 대표단에서 선출 → 학교자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

※ 교직원회에서 교향식 추천을 하는 것은 과도한 경쟁이나 갈등을 억제하고, 모든 교직원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하기 위해서임. 교직원회에서 추천받은 교사는 학교운영에 대한 계획서를 선출 대표단에게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선거를 진행함

- 교장의 역할 : 교직원회의의 주재, 학생회와 학부모회 지원, 학교내외의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및 관리(학교의 행정 및 재정 관리), 교원의 공동학습·연수 등 지원

## ■ 예산계획 (단위 : 억원)



## 공약 05

### 석차 없는 평가체제 구축

일제고사와 고교입시폐지로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하겠습니다.

“경쟁과 성과주의, 입시교육으로 정신적·심리적 질환, 인정욕구의 좌절, 학업스트레스로 고통 받는 학생들을 살리겠습니다.”

#### ■ 추진배경

- 일제고사는 학생, 교사, 학교를 서열화하는 것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및 사교육비 증가,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반교육적 경쟁이 악순환되고 있다.
- 선발기능으로서의 고입연합고사는 그 의미가 상실된 상태이며 선발고사 없이 선지원후추첨의 입학전형으로도 충분하다. 또한 고교입시로 인한 지나친 경쟁을 완화시키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 입시까지 이어지는 획일적 지식평가와 상대평가제도는 미래사회 핵심역량과 창의적 인성을 기르는 교육을 저해한다. 절대평가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 공약내용

-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국가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폐지하겠습니다.
- 고입 선발고사를 폐지하고 무시험(선지원후추첨) 입학전형으로 바꾸겠습니다.
- 교사별 평가체제를 마련하고 논술서술형 평가와 과정평가 중심으로 학생평가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석차 없는 학업성취중심의 절대평가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2009교육과정을 폐지하고 함께 발달할 수 있는 협력중심 교육과정을 도입하겠습니다.
- 교육과정 전면개정을 위한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 민주적 논의절차를 통해 교육과정 발전방향 수립. 과거의 교육과정과 입시에 의한 왜곡을 거울삼아 "누구나 함께 발달할 수 있는 협력교육과정, 수업시수 감축과 학습량 적정화, 수준별 반편성 금지, 교사의 교육

과정편성권과 평가권 부여"를 기본 방향으로 함.

■ 법제도 개선

■ 예산계획 (단위 : 억원)

**공약 06**

**국·공립 중심의 유아교육 체제 구축**  
모든 아이에게 질 높은 유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만 3세부터 유아 공교육이 실현되도록 국공립 교육기관을 확대하겠습니다.”

■ 추진배경

- 유아정책이 보육기관,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관련법, 관할 부처, 교육기관, 교사양성, 교사 자격증이 관리체제가 분산되고 시설간의 경쟁, 교육의 질 저하, 중복투자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 2010년 현재 만 3~5세 유아의 약 81%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나, 약 19%인 26만 명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2010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률 >

연령	취원 대상아 수 <sup>1)</sup>	이용 인원 및 이용률						미이용 인원 및 미이용율	
		유치원 <sup>2)</sup>		어린이집 <sup>3)</sup>		유치원+어린이집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체	1,376,933	538,587	39.1	577,395	41.9	1,115,982	81.0	260,951	19.0
3세	493,452	111,482	22.6	245,342	49.7	356,824	72.3	136,628	27.7
4세	448,200	181,441	40.5	181,891	40.6	363,332	81.1	84,868	18.9
5세	435,281	245,664	56.4	150,162	34.5	395,826	90.9	39,455	9.1

1) 주민등록 인구통계('10.12.31.기준), 2) 2010년 교육통계연보('10.4월 기준),

3)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10.11월 기준)

- 2010년 현재 만 3~5세 유아의 약 81%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나, 약 19%인 26만 명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2010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률 >**

연령	취원 대상아 수 <sup>1)</sup>	이용 인원 및 이용률						미이용 인원 및 미이용율	
		유치원 <sup>2)</sup>		어린이집 <sup>3)</sup>		유치원+어린이집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체	1,376,933	538,587	39.1	577,395	41.9	1,115,982	81.0	260,951	19.0
3세	493,452	111,482	22.6	245,342	49.7	356,824	72.3	136,628	27.7
4세	448,200	181,441	40.5	181,891	40.6	363,332	81.1	84,868	18.9
5세	435,281	245,664	56.4	150,162	34.5	395,826	90.9	39,455	9.1

1) 주민등록 인구통계('10.12.31.기준), 2) 2010년 교육통계연보('10.4월 기준),

3)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10.11월 기준)

- 선진 국가 대부분이 **만3세부터는 유아교육에 편입시켜 운영** 중이고, 유아교육과 보육 간 중복된 기능을 **교육 중심으로 일원화**하거나 **연령별로 이원화**하여 운영

\*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교육으로 일원화하였고, 프랑스, 독일, 덴마크 등은 3(2)세 이상은 교육으로 그리고 2세 이하는 보육 쪽으로 운영

\* 일본의 경우 2006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인정어린이원'으로 통합하여 교육과 보육을 동시에 제공

○ **공적 투자 확대로 대학 등록금에 버금가는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 유아교육에 투입되는 비용이 2008년 현재 OECD 국가 평균의 65% 정도에 불과해 더 많은 공적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음

○ **공립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교육과정 운영의 공공성 등을 담보하기 어렵고, 유아교육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현실**

- 2011년 현재 유치원 재학생수는 총564,834명으로 이 가운데 국·공립 유치원 재학생은 126,055(국립 240명 포함)명으로 전체의 22.3%인 반면, 사립유치원 재학생은 438,739명으로 77.7%에 달함

\* 국·공립 4,499개교(국립 3개교 포함), 사립 3,922개교로 총8,424개교

- 농촌에 비해 중소도시, 대도시로 갈수록 사립유치원 취원률이 높고, 전국적으로도 사립유치원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현실

〈 지역별 만 5세 유아의 공·사립유치원 취원율 〉

(단위 : %)

구 분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취원율 소계
대도시	9.2	40.5	49.7
중소도시	17.0	36.2	53.2
농어촌	28.4	23.6	52.0

자료: 교육통계연보(2008)

- 영어 유치원과 선행학습 지양 등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통한 교육내용의 공공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상존함

## ■ 공약내용

- 만3세~5세의 보육과 유아교육정책을 교과부로 일원화하고 유아학교 학제를 마련하겠습니다.
- 유치원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고 궁극적으로는 무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2012년부터 '5세 누리과정', 2013년부터 만3~4세까지 누리 과정을 확대하고 2015년까지 지원 단가 인상 등을 통한 완전 무상화 추진
- 공립 유치원 신설 및 학급 증설 등으로 수용력 증대: 2017년까지 총 원아의 50% 이상
- 선행학습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 등 파행적인 유치원 운영 정상화, 교육내용의 공공성 강화
  - 유아대상 영어학원 등의 강력 단속 및 법적 제제조치 강화

## ■ 법제도 개선사항

사업명	법제도 개선내용
만3, 4, 5세 공통교육 과정 운영(유·보육 일 원화 등)	- 유아교육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개정 - 영유아보육법 및 동 시행령 등 법률 개정
단계적 무상화 확대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동 시행령 개정 - 2015년부터 유·보육비 부담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으로 일원화하는 수요 포함

## ■ 예산계획 (단위 : 억원)

<표> 소요예산

(단위: 억원)

사업명		2013	2014	2015	2016	2017
유치원 교육비의 단계적 무상화 비용 <sup>1)</sup>		5,672	8,678	12,496	12,496*	12,496*
공립 유치원 학급 신·증설비		297	297	297	297	297
유치원 신규 교사 인건비		277	554	831	1,108	1,385
기존 예산 활용 <sup>3)</sup>	학급 신설비 자연증분 <sup>2)</sup>	30	30	30	30	30
	신규 교사 인건비 자연증분 <sup>3)</sup>	80	160	240	320	400
합계		6,186	9,339	13,354	13,551	13,748

# 공약 07

## 복지국가형 무상교육의 확대

국민 모두가 교육비 걱정 없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걸 맞는 교육재정을 확보하여 국민 모두가 교육비 걱정 없는 복지국가형 무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 ■ 추진배경

- 대다수 OECD국가들은 취학전 무상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은 취학전 교육의 무상화수준이 매우 낮고, 의무교육 종료 연령을 16세에서 18세로 확대하고 있지만 한국은 의무교육 연한을 중학교(14세)까지 실시하고 있다.
- 초중등단계에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인 대다수 OECD 국가들은 기본적인 학교교육비(수업료, 등록금, 운영지원비)를 포함하여 교과서 대금, 학습재료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과 실시하지 않는 지역 간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식비운영 예산의 50%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주요 OECD 국가의 무상교육 지원 현황(2006년)

국가명	실시기간	무상 지원 내용	학부모 부담
미국	12년 초, 중, 고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금, 학교운영지원비, 통학비, 학습재료비 ※ 주마다 차이 있음	○급식비 - 부모 소득수준에 따라 무료 또는 보조 ○학교운영기부금(자발적) ※ 사립의 경우 모든 비용은 학부모 부담
호주	10년 초, 중등 (전기과정)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금, 학습재료비, 통학비	○ 교복비, 급식비, 캠프 등 야외행사 ○ 기부금-자발적 형태이나 거의 의무적으로 납부 - 연 4회 정도 학부모회가 주최하는 학교보조를 위한 기부금 모금행사 개최
독일	12년~13년 초등(4) 중등(8~9)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금	○ 통학비 ※사립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을 일부 혹은 전부 학부모 부담(주별 차이 있음)

캐나다	12년 초(5), 중(3), 고(4)	○수업료, 입학금, 학교 운영지원비, 통학비, 교 과서대금, 학습재료비, 방과후교육비	○ 급식비 ○ 학교운영지원비는 관할교육청으로부터 학생수에 비례하여 단위학교에 지원되 나, 재원부족으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회를 통해 기금조성 행사를 함
영국	11년 초(6), 중(5)	○등록금, 입학금, 교과 서대금	○ 급식비 : 빈곤층 자녀 무료 / ○ 클 럽활동비, 수학여행경비 ○ 학교발전기금(희망자만 납부)
일본	9년 소학교(6) 중학교(3)	○수업료, 입학금, 교과 서대금 - 사립 : 교과서대금	○PTA(Parent-Teacher Association 사친 회) 회비 -학교단위별 PTA에서 자율적으로 회 비결정(학교에 따라 차이 있으나 월 500~1,000엔 수준)하며, 회계도 자체 관리

## ■ 공약내용

- 고교까지의 의무무상교육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 학교교육활동비(방과후 교육비, 교과서대금, 체험학습비 등)의 학부모 부담경비를 제로화하겠습니다.
- 농산어촌(읍면동)의 고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급식재정의 50%를 국가(중앙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 법제도 개선

-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 확대 :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의 개정

## ■ 예산계획 (단위 : 억원)

- 1) 고교의무교육예산 : 연평균 약 2조 7천억원 [ 약 180만명 \* 학교운영  
지원비 + 수업료]
- 2) 고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 단가 평균 2,500원\* 700만명 \* 180일  
= 31,500억원



## 공약 08

###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

귀족 학교 정책을 폐기하고 모두를 위한 혁신학교를 확대하겠습니다.

“1%를 위한 특목고, 자사고 등 귀족교육정책을 폐기하고, 99%를 위해 고교 평준화와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 ■ 추진배경

- 특목고- 자사고 - 자율고- 일반고로 이어지는 수직적 고교체제가 구조하면서 고교 간 학력격차 및 1인당 공교육비 지원 격차 등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 과학고, 외고, 예술고 등 특목고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입시교육으로 변질되었고 자사고도 특목고와 마찬가지로 교육비가 1천만 원이 넘는 상류층을 위한 귀족 학교로 변질되고 있다.
- 고교 평준화는 고등학교 서열화를 없애고, 학교간의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고등학교 교육단계까지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직업교육에 대한 철학 부재와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서 직업교육예산 축소와 산학협력체제 시스템 구축 등의 직업교육 내실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 공약내용

- 선발기능이 상실된 고교연합고사의 폐지하고 고교평준화 실시 지역을 확대하겠습니다.
- 입시교육으로 변질된 특목고, 자사고, 외국어고의 정책을 전면 전환하겠습니다.
- 자립적 기반을 갖지 못한 자율형 사립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특목고, 자사고 신설을 엄격히 제한한다.
- 특성화고와 산학연계 교육을 강화하고 고교취업 할당제와 직업교육체제(대학, 평생교육시설)를 정책으로 실현하겠습니다.

■ 법제도 개선

■ 예산계획 (단위 : 억원)

“국립대와 정부지원 사립대를 결합하여 대학통합네트워크(공동학위대학)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고 지방(국립)대학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겠습니다.”

### ■ 추진배경

- 한국 대학에서 국공립학교의 비율이 OECD국가 중 가장 낮으며, 독립사립대학교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또한 2008년 GDP대비 고등교육 단계의 정부부담은 0.6%로 OECD국가 평균 1.0%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에 불과하며, 이에 비해 민간부담은 1.9%로 OECD국가평균 0.5%의 4배에 해당할 정도로 높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교 등록금의 경우 한국은 국립과 독립사립 모두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비쌉니다.
- 우리나라의 대학은 서울의 상위권 대학-서울지역 대학-수도권지역 대학-지방 국립대-지방사립대학으로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위서열의 대학에 진학하기위하여 초중등교육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왜곡되고 있고, 입시명문고, 상위서열의 대학에 진학하기위한 경쟁은 사교육비의 폭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진학 후에도 상위서열 대학으로 편입 등으로 대학교육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 이명박정부는 대학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학을 시장화하는 신자유주의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국립대를 민영화하는 법인화 추진 및 국립대를 통폐합하여 축소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추진 중이며, 또한 부실대학의 국공립화, 국립대의 공공성 강화 등 대학공공성 강화 방안 없이 대학구조조정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교육공공성 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대학체제가 필요합니다.

### ■ 공약내용

- ‘국립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실 사립대를 국공립화하고, 독립사립대를 ‘정부지원(책임형)대학’으로 전환하여 공공적 대학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 국공립대와 정부지원(책임형)대학 확대 계획

- 1단계 (2015년까지) : 100개 대학 이상, 총 대학정원의 50% 이상  
 - 기존의 국공립대학(39개교), 부실 사립대 국공립화(20개교), 정부지원 사립대학(40 개교)  
 ※ 2012년부터 대학통합네트워크에 참여할 대학을 선정하고,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교수진을 확대하고 시설을 정비
- 2단계 (2020년까지) : 150개 대학 이상, 총 대학정원 75% 이상

- 국립대와 정부지원대학을 결합하여 대학통합네트워크(공동학위대학)를 구성하고, 대학통합네트워크의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여 대학등록금을 고등학교 등록금 수준(200만원 내외)으로 대폭 인하하겠습니다.
- ‘대학통합네트워크(공동학위대학)’의 대학들은 학생을 공동선발, 학점교류, 공동(통합)학위수여를 통해 ‘대학네트워크’ 참여대학의 평준화를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서열체제를 해체하고, 지방 국립대학을 서울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대학통합네트워크(공동학위대학)’로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여 과중한 입시교육을 해소하여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대폭 감소시키겠습니다.(총사교육비의 2/3~3/4을 감소)

### ■ 예산계획

	2014	2015	2016
대학통합네트워크 정원 20만 명의 경우	4조	4조	4조
대학통합네트워크 정원 30만 명의 경우	6조	6조	6조

\*1인당 대학등록금 지원액 500만원(대학평균등록금 750만원-고등학교수준 등록금 250만원)×20만 명= 1조원

\*1인당 대학등록금 지원액 500만원(대학평균등록금 750만원-고등학교수준 등록금 250만원)×30만 명= 1조 5천억원

\*4개 학년 : 4조원 또는 6조원

## 대학입학자격고사의 실시

“입시제도를 대학입학자격고사체제로 전환하여 입시경쟁교육과 대입 사교육을 해소하겠습니다.”

### ■ 추진배경

- 한국사회에서 대학입시는 상위서열의 대학과 인기학과 진학을 위한 경쟁의 장으로서, 초중등교육은 이러한 입시에 종속되어 영·수·국 등 입시과목을 중심으로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입시경쟁에는 20조원이 넘는 막대한 사교육비가 동반되고 있으며, 대학입시를 매개로 사회적, 교육적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총 사교육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총 사교육비	200,400	209,095	216,259	208,718	201,266
실질 총 사교육비	225,371	222,361	223,122	208,718	193,711
(사교육관련물가지수, 2010년=100)	88.9	94.0	96.9	100.0	103.9

- 이명박 정부는 ‘대학입시의 자율화’라는 이름으로 입학사정관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둘째, 수능시험을 영, 수, 국 위주의 수준별 수능체제로 개편하고, 셋째 내신의 절대평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첫째, 대학서열체제의 고착화, 둘째, 특목고, 자사고에 유리한 입시체제의 형성, 셋째, 영수국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 이명박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입제도에 대한 전반적 개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학입시의 전형요소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입시과외, 사교육비 문제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원적으로 대학서열체제를 타파하는 입시제도로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 ■ 공약내용

- '대학통합네트워크(공동학위대학)'의 대학들은 입학사정관제, 수준별 수능시험, 대학별본고사를 폐지하고 대학입학자격고사(내신포함)로 전환합니다. 대입자격시험을 통과한 학생에게 '대학통합네트워크'의 입학자격을 부여합니다.
- 대학입학자격고사로 '합격'/'불합격'으로 구분하여 학생을 선발하도록하여 치열한 점수경쟁을 해소하고, 입시경쟁교육과 사교육을 대폭적으로 감축합니다.
- '대학통합네트워크(공동학위대학)'의 외부에 존재하는 일부 독립사립대에 대해서는 내신 성적과 대학별 고사 등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되, 입시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 실행전략

- 대입자격고사(논술형)의 통과여부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프랑스의 바칼로레아 방안) 또는 고교 내신 성적과 대입자격시험 두 가지 모두의 통과여부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독일의 아비투어 방안)을 지향하되 과도적 방안을 도입합니다.
- 과도적으로 1) 고교내신과 대학입학자격시험(객관식 시험)을 일정비율로 반영, 합산하여, 입학기준점수의 통과여부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 2) 고교 내신성적으로 일정 비율(예를 들어 70%)을 선발하고(내신 전형), 대학입학자격고사로 일정 비율(예를 들어 30%)을 선발(대입자격고사 전형)하는 두 가지 방안 중에서 하나를 최종 결정하여 시행합니다.

“전문대학을 정부 지원 대학으로 개편하고 폴리테크닉체제로 전환하여 직업교육을 체계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 ■ 추진배경

-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은 사립대학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2010년도 국공립대학 입학정원은 4,784명으로 전체 입학정원의 2.1%이며 나머지 98%가 사립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립전문대학의 연간 등록금은 600만원으로 일반국공립대 등록금 420만원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 일반대학이 취업률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전문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학과를 개설하면서 직업대학으로서의 전문대학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으며, 전문대학은 서열화 된 대학체제의 최하위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 전문대학졸업자들의 월임금의 중위 값은 150만원으로 이는 서울소재 일반대학 졸업자 218만원이나 비서울권 소재 일반대학졸업자 180만원에 비해 30~68만원이 낮은 금액입니다.

### ■ 공약내용

- 전문대학을 국·공립화를 추진하고 정부지원을 늘려 정부지원 직업대학으로 개편하겠습니다.
- 전문대학과 폴리텍대학을 통폐합하여 폴리테크닉(2~4년)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 4년제 대학에서 전문대학과 중복되는 학과 및 전공영역을 폐지하여 폴리테크닉으로 이관하여 직업대학체제를 새로이 정립하겠습니다.
-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대학졸업자와 직업대학 졸업자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 예산계획

	2014	2015	2016
전문대학정원 25만 명	2조	2조	2조

\*2011년 입학자 수는 249,693명임

\*1인당 대학등록금지원액 400만원(전문대학평균등록금600만원-고등학교수준 등록금200만원)×25만명= 1조원

\*2개 학년 지원 : 2조원



“ 구성원이 동수로 참여하고 대학운영의 실질적 권한을 갖는 대학평의회의 설치를 전면화하고, 대학운영의 시민참여를 확대 하겠습니다 ”

## ■ 추진배경

- 한국대학의 대부분은 사립이며, 게다가 사립재단에 의한 대학운영의 현행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 핵심에는 사학법인이사회가 있으며 이는 예 결산권, 임원 및 총장 임면권, 정관변경사항,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사립학교 경영에 관련 중요사항의 심의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대학운영에 관련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장을 중심으로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 결과 부정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대학평의회가 도입되었지만, 그 실효성은 미미합니다. 더욱이 대학평의회는 2005년 법제화한 지 6년이 지났지만 평의회가 제대로 기능하는 사학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2010년 기준 4년제 사립대 145곳 가운데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11곳은 아예 대학평의회를 설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국공립대법인화와 구조조정을 매개로 하여, 총장 직선제를 폐지시키는 등 대학운영의 민주성이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 ■ 공약내용

- 대학구성원이 동수로 참여하는 평의회를 구성하도록 합니다. 현재의 사학법에는 “평의원의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만 단서를 달았을 뿐, 구성원 동수에 의한 민주적운영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지 못합니다. 교원, 직원, 학생이 동수로 참여하여야만 특정집단에 의한 전횡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대학평의회의 기능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의 대학평의회는 단지 사학법인에 대한 형식적인 견제역할 조차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대학운영이 민주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학구성원이 동수로 참여하는 대학평의회가 실질적인 대학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즉, 기존의 이사회가 하던 역할과 권한의 상당부분을 대학평의회로 이관시켜야 합니다. 즉, 이사회의 역할을 축소하고, 대학평의회가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서부터 임원인 임면 및 경영전반에 대한 심의 의결의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 대학평의회 설치를 전면화 합니다. 사립과 국공립을 불문하고 모든 대학에 대학운영의 실질적 권한을 갖는 대학평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하여 특정주체에 의한 전횡이 가능한 법인 이사회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대학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 대학운영에 대한 시민 사회의 참여를 확장합니다. 대학은 더 이상 특정집단의 사유물이거나 소수에 의해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학이 보편적인 교육기관으로 기능하려면 사회구성원의 참여, 특히 대학이 존재하는 지역사회 시민들의 참여속에서 그 운영의 투명성이 더욱 확장되고, 공공적 기능도 강화될 것입니다.

## 학술 학문의 균등한 발전

“학술 학문 정책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교육 연구 여건의 제도적 보장을 통하여 학술 학문의 균등한 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 ■ 추진배경

- 한국대학의 학술 학문 정책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학술 학문 정책의 시장화로 연구자들이 순수학술활동과 기초연구보다는 국가 지배엘리트와 자본의 이해와 필요에 부응하는 단편적이고 실용적인 연구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 특히 2009년 6월, 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과 한국과학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등 3개 단체가 통합되어 한국연구재단이 출범된 이후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통합된 기구로 학술 지원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이 주요 설립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학자들 사이에선 연구재단의 인문·사회 분야 사업과 학술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문·사회 학문의 실태에 대한 진단

(단위:%)

	적합하지않음	보통	적합함
학문 후속세대의 고용불안정	5.7	6.7	87.6
학술활동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통제 시도 증가	18.5	21.8	59.7
해당 학문분야에 대한 사회적 수요 저하	41.9	16.7	41.4
지식생산의 질적 수준 저하	25.3	34	40.7
실용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유용한 지식생산에 대한 요구와 수요증가	33.2	27	39.8
지식의 현실적합성 상실	33.8	29	37.2

자료: 학술단체협의회

- 연구 활동의 독립성은 상실되고, 게다가 근시안적으로 당장의 실용적 결과만을 강요하는 풍토는 학문생산과 학문 적실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연구자들이 박사학위 취득 이후 후속 연구의 질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이론적 혁신이나 널리 인용될 수 있는 학술적 기여를 담은 연구결과를 생산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제약되고 있습니다.
- 국가 지배엘리트의 연구 활동에 대한 개입과 간섭은 학문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편향적인 재정지원과 연구재단의 운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학술 학문정책을 심각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즉 주요 연구재단의 사업구성 문제로 연구비가 이공분야, 대형사업, 융합과제에 편향 집중되어 학문간 불균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 연구비 수혜현황

학문분야	교원수	정부연구 비수혜자	정부 연구비 수혜율	정부지원 과제수	정부지원 연구비	정부지원 1인당 평균과제수	정부지원 1인당 평균연구비
인문사회	27,955명	3,946명	14.1%	5,719개	3,137억원	1.45	7,900만원
이공분야	32,143명	12,228명	38.0%	25,457개	2조3,078억원	2.08	18,900만원
합계	60,098명	16,174명	26.9%	31,176개	2조6,215억원	1.93	16,200만원

출처: 2007년도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2008.12 한국학술진흥재단)

## ■ 공약내용

- 학술 학문정책의 독립성을 보장하겠습니다. 국가지배엘리트와 자본으로부터 연구활동이 종속되지 않으려면 국가수준에서부터 대학원과 대학에 이르기까지 학술정책의 기획·집행에 있어서 연구자들의 자율성 보장해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각종 연구재단에 운영에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연구재단 운영 자체가 특정집단의 이익에 복속되지 않도록 사회적 참여에 근거하여 연구재단 운영을 민주화하여 사회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각종 연구재단의 지배 운영 구조를 개편하겠습니다.
- 학문간 균형발전을 위해 그동안 이공계 중심의 연구 지원활동에서 벗어나 인문·사회과학 연구의 경우 내실 있는 연구를 위한 지원을 확대

하겠습니다.

-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자원 낭비를 야기하는 연구지원사업의 대형화를 지양하겠습니다. 연구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연구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고,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를 위한 충분한 연구기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이룩하겠습니다. 특히 비정규 교수 및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 학문간 특수성을 고려한 연구 지원 활동을 하겠습니다. 즉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과는 각기 다른 학문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각 학문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 심사, 평가 과정을 재구성하겠습니다.

# 공약 14

##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

“ 비정규교수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근본적 개선하여 불안정노동을 철폐하겠습니다 ”

### 추진배경

- 현재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강의의 절반은 비정규교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교육개발원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비정규교수는 약 11만여 명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중복출강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비정규교수의 수는 7만 7천여 명으로 산출됩니다. 그런데 정규교원의 수가 7만 7천여 명임을 감안하면 대학에서 연구와 강의 절반을 담당하는 교수들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유형별 시간강사 현황

구분(단위 : 명)		일반대	산업대	(국)교육대/ (사)대학원대	전문대	계
국공립	시간강사	14,126	1,778	1,463	561	17,928
	(전임교원)	(15,600)	(936)	(870)	(305)	(17,711)
사립	시간강사	60,579	1,696	337	22,851	85,463
	(전임교원)	(45,420)	(1,082)	(562)	(12,225)	(59,289)
합계	시간강사	74,705	3,474	1,800	23,412	103,391
	(전임교원)	(61,020)	(2,018)	(1,432)	(12,530)	(77,000)

\* 출처: 2010년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통계조사(2010.4.1 기준, 이하 동일)

\*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 교대, 대학원대 대상이며, 방송대, 각종대, 기술대, 사내대, 사이버대를 포함 강사 수는 110,452명임

- 한국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OECD 주요국의 2배에 가깝습니다. 2010년 기준 OECD 평균은 16.2명인데 반해 한국은 31.2명으로 나타났으며, 사립대의 경우는 38명에 육박해 교육 환경이 대단히 열악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최소 OECD 평균에 맞추려고 해도 7만 명 이상의 전임교원을 더 뽑아야 된다는 것이며, 이는 비정규교수의 정규직화가 대학교육의 공공성실현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의미합니다.

OECD 주요국 4년제 대학 교원 1인당 학생 수 현황(2006년)

(단위: 명)

구분	한국	프랑스	영국	핀란드	미국	호주	독일	일본	스웨덴
학생수	31.2	17.1	16.4	15.8	15.1	14.9	12.5	11.9	9.0

출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연구보고서(2011), 『대학체제 및 교육과정 개혁모델에 관한 연구』, 98쪽 참고.

- 한편 대학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상당수도 불안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청소 시설관리노동자들은 대부분은 외주 용역 노동자로 고용되어 있어 고용불안은 물론 노동조건도 매우 열악합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대학구조조정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있으며,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고 차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 공약내용

- OECD 평균 수준으로 전임교원을 충원하겠습니다.

법정 교원확보율을 100%로 하려면 당장 5만 명 이상의 전임교원이 더 필요합니다. 이는 2011년 기준 전업강사 4만 4천여 명을 모두 수용하고도 남는 숫자입니다. 또 교원 1인당 학생 수(4년제 대학의 경우 36.2명)를 OECD 가입 국가 평균 수준(약 15명)에 맞추려면 최소 7만 명 이상의 전임교원이 더 필요합니다.

- 비정규교수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전임 교원화 즉 정규직화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생활임금을 보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가 재정지원을 통해 비정규교수의 임금을 지원하는 방안(이는 대학등록금 인하의 효과도 가져옴)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강의시수의 보장(주당 최소 9시간)하고 대학 조교수 평균 연봉의 2/3 이상 또는 3

인 가구 표준생계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대학이라는 공공영역에서 도급 등의 간접고용으로 이중삼중의 착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직접고용은 간접고용에서 발생하는 임금의 누수현상(하청업체의 중간착취)를 막고, 노동자의 직무 몰입도를 높여 결과적으로 업무의 능률도 상승하여 궁극적으로 보다 양질의 대학교육의 인프라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현재의 임금수준에서 벗어나 생활임 가능한 임금수준으로 상승시키겠습니다. 또한 연봉제와 같은 포괄임금제가 아닌 호봉제로 전환하며, 각종 수당등도 정규직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학은 교수들의 노동 외에도 다양한 노동자들의 협업과 분업 속에서 운영되며, 이들의 노동 없이 대학의 정상적인 운영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대학이 이윤추적과 효율성을 명분으로 노동자들에 차별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초중등교육기관이 비정규직을 보면 주요 직종으로는 급식업무를 담당하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사무업무와 관련된 사무·행정보조, 교무보조, 수업과 관련된 과학실업무보조, 실습보조, 특수교육보조 등이 있으며 30여개의 직종에 이른다. 학교비정규직은 2010년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15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 ■ 공약내용

● 교육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비정규교수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교원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 공약 15

## 사립학교의 부패방지 제도화 사립학교의 족벌운영을 방지하고 인사위원회를 법령으로 규정하고 정교사 채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사립학교에서 부패방지를 제도화하고, 교원채용 및 인사제도를 투명하게 하여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확보 하겠습니다”

### ■ 추진배경

- 우리나라 사학은 부패의 대명사가 되었는데 이는 이사회와 학교의 족벌 운영으로 인한 비민주성과 폐쇄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불법 찬조금을 처벌하는 규정과 사립학교 내부고발자보호법이 없는 점도 비리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비리를 예방할 수 있다.
- 사학에서의 인사비리는 교비 횡령 및 회계 부정과 더불어 부패의 핵심적 사안이다. 특히, 교사채용 비리는 교육의 질과 직결되어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사안이다. 사립학교법에서 인사위원회의 조직 기능과 운영에 대하여 정관에 따르도록 하여 대부분의 사학들이 인사위원회를 위법적,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2010년 국정감사 결과를 보면 전국사립중고등학교에 교원의 정년퇴임, 명예퇴직, 의원면직, 사망 등으로 결원보충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규교원을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국의 사립초중고교에서 신규교원의 70.9퍼센트를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 ■ 공약내용

- 사립학교의 부패방지 방안을 제도화하겠습니다.
  - 족벌운영 방지 : 이사장·이사의 4촌이내 친인척 학교장 임명 제한 및 이사간 친족 비율 제한
  - 개방이사·감사제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위원회 추천 강화
  - 이사취임승인 취소 규정에 위법 방조 포함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대학평의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 불법찬조금 처벌규정 마련(초중등교육법)

- 사립학교 내부고발자보호 규정 마련
- 초·중·고 사립학교 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 심의절차를 법령으로 규정하여 교사 채용비리를 예방하고 사립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 사립학교법 기간제교원 사유 이외의 채용 시 과태료규정을 마련하여 정교사 채용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국회의 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 사립학교법 54조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 '학급감축,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로 개정

## 공약 16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폐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하고, 비리사학재단을 퇴출시켜 학교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사학부패방지와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학비리를 근절하고, 비리사학을 정부지원형 사립학교로 준공영화하여 혁신학교로 지정하겠습니다”

#### ■ 추진배경

- 이명박-한나라당 정권하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학비리 등으로 법의 단죄를 받아 퇴출된 사학비리재단들을 모두 복귀시켰습니다.
-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비리사학재단을 복귀시키기 위하여 대법원 판결의 왜곡, 심의기준의 자의적 적용, 회의록 파기 및 미공개, 위원들의 심의예정인 비리 재단 소송 수임 등 온갖 불법과 탈법행위를 행하였습니다.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해 사학비리재단이 복귀한 학교에서는 예외 없이 사학분규가 발생하여 교육과 연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에 의해 사학비리재단들이 예외 없이 복귀하였고 이로 인해 사학비리가 전염병과 같이 다시 창궐하여 사립학교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 ■ 공약내용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위법·부당성이 있고, 비리재단의 복귀로 사학분쟁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임원선임처분을 취소하거나 철회하여 비리사학재단을 다시 퇴출시키겠습니다.
- 비리사학재단을 복귀시키기 위하여 온갖 불법과 탈법행위를 행한 위헌적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겠습니다.
- “사학부패방지 및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비리사

학을 정부지원형 사립학교로 준공영화하여 혁신학교·혁신대학으로 지정하겠습니다.

- 사학비리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등 학교운영에 적합한 신뢰성과 도덕성이 없는 자는 학교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사학비리를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공약 17**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학교에서부터 교과부까지 전문가 참여형 거버넌스**  
**체제와 지원행정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공룡의 교육과학기술부를 해체하여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의 행정집행을 이원화하고,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 **추진 배경**

- 지시와 감시, 통제를 근간으로 하는 권위주의와 관료주의 교육행정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고등교육행정은 대학준칙주의와 대학자율화라는 명분으로 대교협이나 전교협에 권한을 사유화한 반면 초중등교육행정은 중앙집권적인 교육행정체제로 권한이 집중되어 비효율적인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와 자유, 자율성을 억누르는 교육과학부의 과도한 권한을 개선해야 한다.
- 행정고시를 통해 관료로 입문한 교육 관료들이 교과부를 장악하고 대부분의 교육정책을 결정한다. 그들은 교육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며, 교육철학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의 교육 권력을 해체하지 않고는 교육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는 불가능하다.
- 시도교육청(16개)과 시군구 교육청(180여개)은 비록 시군구 교육청이 최근에 명칭이 지원청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위에 군림하는 행정기관이다. 교육청의 중심 인력인 장학사들은 그 명칭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정처리 일꾼에 불과하며, 그 직책은 승진을 위한 징검다리에 불과하다. 교육청의 해체 및 기능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 교사(교수)-학생-학부모 등 교육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교육주체들은 교육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또한 교육과 이해관계가 깊은 각계각층의 사회 세력들도 특히 사회적 약자일수록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처지이다.
- 이명박정부의 대학자율화 정책에 따라 대학평가 및 대학입시정책의 권한을 대교협과 전대협에 이양했으나 대학 및 고등교육 전반에 관한 정

책과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행정을 분리하고, 대교협과 전대협의 기능을 환수하여 체계적으로 국가가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 ■ 공약내용

###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 위상 : 국가의 주요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입안, 심의, 결정
- 구성 : 교원 (교사+교수), 학생(대학생 대표), 학부모 대표, 공익적 사회단체 추천인, 정부 추천인(교육전문가)
- 조직 : 유초중등 위원회, 대학위원회, 평생교육위원회 + 사회적 교육과정 위원회

※ 교원은 초중등 교원의 경우 지역교육청의 장학위원회, 교원단체 등이 추천하고 대학교원은 대학통합네트워크에서 추천하여 면접, 활동경력, 연구실적, 교육정책 계획서 등을 참조하여 선발

### ● 교과부의 집행기구로의 전환

#### ※ 교과부의 재편 - 집행기구화

- 위상 :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을 집행, 세부 실행계획 수립
- 구성 : 현직 교원(교사와 교수)이 정원의 2/3 + 일반 관료
- 조직 : 유초중등국, 고등교육국을 중심으로 편제

#### ※ 장학위원회의 주요 활동 영역

- 학교 운영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및 컨설팅 활동
- 교수-학습 및 평가에 대한 지원 및 진단 활동
- 교사 연수 및 교사 학습·연구팀 지원 활동
- 학교 현장의 비리와 독선적 운영에 대한 감시 활동

### ● 교육청을 장학위원회와 학교 및 지역교육지원센터로 재편

#### ※ 학교지원센터의 역할

-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연계 활동 지원

- 지역에서 청소년을 위한 교육-문화-체험 활동이 가능한 인프라의 구축과 관리
- 학교시설 관리 지원 및 급식 지원 시스템 마련 등 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지원

● 교육자치제를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한다.

민선 교육감과 선출직 교육위원,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등으로 지방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수준의 교육정책과 예산 배분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학교지원센터와 별도로 교육위원회를 설치할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한다. 시의회나 군(구)의회 구성 시 교육전문가, 교육활동가들의 직접선거나 비례대표선거 등으로 선출되어 국가적, 지역적 교육정책 결정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마련되어 교육복지 및 평생학습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자치권, 자율권, 참여권을 주체적으로 행사하도록 한다.





## 제안1

### 학부모, 대학생의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설학원의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영어몰입교육, 국영수 중심의 입시 제도를 개선하고, 선행학습을 금지시켜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 ■ 추진배경

- 공교육비뿐만 아니라 사교육비 부담의 증가는 저출산 및 결혼기피의 또다른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 사교육비의 총규모는 약 20조원이 넘고, 가구당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교육격차로 인한 교육양극화로 이어지고 있고 어린 시절부터 과도한 학습노동과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 기숙형 학원들이 법적인 근거 없이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불법 기숙학원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고 스파르타식 반복학습, 선행학습, 문제풀이식 학습과 면회, 외출 금지, 체벌 등 반인권적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
- 고용불안과 함께 대학생은 취업에 필요한 조건인 스펙(학점, 해외연수, 자격증 등)을 갖추기 위해 영어, 전공, 자격증취득 등에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 ■ 공약내용

- 사교육이 필요 없는 특목고, 자사고의 입시전형 및 대학입시제도를 만들겠습니다.
- 초·중학교까지 석차없는 절대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학교 내 일제식 시험관행을 고치겠습니다.
- 학원교습시간 단축 및 수강료 상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 유치원까지 영어조기교육 및 초중고 재학생의 선행학습과 기숙학원 수강을 금지하도록 학원법을 개정하겠습니다.
- 취업, 공무원시험 등 모든 인력선발에서 영어(인증)능력을 요구하는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 초중고의 영어공교육 및 대학의 교양영어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법제도 개선

■ 예산계획 (단위 : 억원)

## 제안 2

### 사교육비의 획기적 감소

“자사고, 외고 등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과 대학서열화체제 해소를 통해 사교육비의 2/3~3/4을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 사교육비 실태

- 이명박정부는 공약으로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감축하겠다고 공약하였으나 사교육비 총액은 교육부 통계상으로도 20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고, 방과 후 학습비, EBS교재구입비 등을 포함하면 사교육비 총액은 증가한 상황입니다.

연도별 총 사교육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총 사교육비	200,400	209,095	216,259	208,718	201,266
실질 총 사교육비	225,371	222,361	223,122	208,718	193,711
(사교육관련물가지수, 2010년=100)	88.9	94.0	96.9	100.0	103.9

- 이명박정부가 입학사정관제, 영·수·국 교과에 대한 수준별 수능체제 도입, 영·수·국 중심의 교육과정 확정 등으로 대입체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사교육비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의 가중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음에도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1인당 사교육비는 지속되고 있거나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가 자사고를 도입하면서 외고, 자사고 진학을 위하여 중학교단계에서 사교육비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표 3 > 학교급별 총 사교육비 및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09~'11)**

구 분	총 사교육비 (억원,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만원, %)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전 체	216,259	208,718	△3.5	201,266	△3.6	24.2	24.0	△0.8	24.0	-
·초등학교	102,309	97,080	△5.1	90,461	△6.8	24.5	24.5	-	24.1	△1.6
·중학교	62,656	60,396	△3.6	60,006	△0.6	26.0	25.5	△1.9	26.2	2.7
·고등학교	51,294	51,242	△0.1	50,799	△0.9	21.7	21.8	0.5	21.8	-
·특성화고	3,441	3,730	8.4	3,158	△15.3	6.0	6.7	11.7	6.4	△4.5
·일반고 등*	47,853	47,512	△0.7	47,640	0.3	26.9	26.5	△1.5	25.9	△2.3

\* 자율고, 특목고(마이스터고 21개 등)를 포함

- 또한 과목별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입시위주의 교과목이 전체 사교육비의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수·국 중심으로 수준별 수능체제를 확정함에 따라 이에 연동하여 영어와 수학교과와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표 4 > 과목별 월평균 사교육비('10~'11)**

(단위 : 만원, %)

구 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0	'11	증감률	'10	'11	증감률	'10	'11	증감률	'10	'11	증감률
전 체	24.0	24.0	-	24.5	24.1	△1.6	25.5	26.2	2.7	21.8	21.8	-
· 일반교과	19.5	19.3	△1.0	17.5	16.8	△4.0	23.8	24.3	2.1	18.4	18.5	0.5
· 국 어	2.1	1.9	△9.5	1.9	1.7	△10.5	2.5	2.2	△12.0	2.1	1.9	△9.5
· 영 어	8.0	8.1	1.3	8.5	8.2	△3.5	9.1	9.5	4.4	6.2	6.5	4.8
· 수 학	6.8	7.0	2.9	4.5	4.4	△2.2	9.0	9.7	7.8	8.6	8.7	1.2
· 사회, 과학	1.4	1.3	△7.1	1.2	1.1	△8.3	2.4	2.2	△8.3	0.9	0.8	△11.1
· 제2외국어 등	0.5	0.4	△20.0	0.6	0.5	△16.7	0.5	0.4	△20.0	0.2	0.2	-
· 논술	0.6	0.7	16.7	0.8	0.9	12.5	0.4	0.5	25.0	0.5	0.5	-
· 예체능 등	4.5	4.6	2.2	7.0	7.3	4.3	1.6	1.8	12.5	3.1	3.0	△3.2
· 음 악	2.0	2.1	5.0	3.2	3.4	6.2	0.7	0.8	14.3	1.3	1.2	△7.7
· 미 술	0.8	0.7	△12.5	0.9	0.9	-	0.3	0.2	△33.3	1.0	1.0	-
· 체 육	1.4	1.5	7.1	2.4	2.7	12.5	0.5	0.6	20.0	0.5	0.4	△20.0
· 취미·교양	0.3	0.3	-	0.4	0.4	-	0.1	0.2	100.0	0.3	0.4	33.3

- 결국 기존의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경쟁에 더하여 이명박 정부의 자율형

사립고 정책과 영어, 수학중심의 수능체제의 개편으로 이 분야의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 사교육비 감소대책

- 사교육 증가원인과 관련한 학부모대상 설문조사결과 사교육증가 우선순위가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우선순위 상위 3가지를 분석하면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고, 서열화 된 대학과 특목고가 점수위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이라는 점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표> 사교육 증가원인 우선순위(단위 : 5점 척도)**  
(학부모 대상 설문)

순 위	내 용	점 수
1	취업 등에 있어 출신 대학이 중요하기 때문	4.21
2	특목고, 대학 등 주요 입시에서 점수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	4.17
3	대학 서열화 구조가 심각하기 때문	4.11
4	부모세대의 전반적인 학력상승, 저출산 등 자녀에 대한 기대치 상승 때문	3.97
5	사교육이 보편화 되어 있어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	3.68
6	학교교육만으로는 자녀의 특기적성을 제대로 키워주기 어려워서	3.65
7	과거에 비해 국민경제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3.58
8	학교에서 자녀 학습관리를 개별적으로 잘해주지 못해서	3.32
9	학교에서 이뤄지는 진학준비, 상담, 정보제공이 부족해서	3.24
10	학교에서 수준별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3.22
11	학교시험이 학교에서 실제 배우는 내용보다 어렵게 출제되어서	2.96
12	학교의 학습분위기, 학습시설 등이 좋지 않아서	2.75

- 따라서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서열체제해소와 고교평준화체제를 재정립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대학통합네트워크(공동학위대학)-대입자격고사’로 대학체제와 대입제도를 변경하고, 고교평준화체제를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전체 사교육비의 2/3~3/4에 해당하는 사교육비를 감축시킬 수 있습니다. (입시대비 일반교과 사교육비의 비중이 전체 사교육비의 4/5에 해당됨)

**<표> 사교육비 감축을 위한 대학체제와 고등학교제도 개편**

	현행		사교육비 감축 체제	
	학교체제	입시제도	학교체제	입시제도
대입 단계	대학서열화체제	입학사정관제, 수 능, 내신, 면접	대학통합네트워크(공동학위 대학) 체제	대학입학 자격고사
고입 단계	○외고, 자사고 체제 ○고교비평준화체제	○영어내신 또는 중학교 내신성적 ○고입연합고사	○외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고교평준화체제 재정립	무시험

- 이를 기본정책으로 하여 일제고사(전집형 학업성취도평가)를 표본을 선정하여 진행하는 표집형 학업성취도평가로 전환하겠습니다. 일제고사의 폐지로 일제고사대비 사교육을 완전히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 ‘대학서열체제 해소-고교평준화체제 재정립-일제고사 폐지’위에서 공교육의 내실화정책을 추진하여 망국적 사교육비를 우리나라에서 추방하고 공교육을 새로운 반석위에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제안 3

### 인권친화적인 평화로운 학교 정책 추진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관련 교육 및 치유시설 과 지역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겠습니다.

“물리적, 구조적 폭력, 또래집단의 폭력으로부터 학생(아동)의  
인권과 행복이 최우선으로 보장되는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 ■ 추진배경

- 학교폭력은 사회적 양극화 확대, 가족의 돌봄 기능 약화, 경쟁위주의 교육정책, 권위적인 학교문화, 아동기를 상실한 학생들의 인정요구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 경찰과 정부의 예방대책은 처벌과 격리 위주의 사후대책, 생활기록부 반영 및 입시반영 등의 낙인정책, 교사와 학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 과도한 행정업무와 성과급, 교원평가 등의 교원경쟁체제, 교장중심의 권위적인 학교문화는 학생, 교사의 인권침해를 해결하는 자생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 학생인권 과 교원인권 침해 및 경쟁교육시스템에서의 피로누적으로 학생, 교원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다.

#### ■ 공약내용

- 학교폭력예방과 학생인권보장 정책을 위한 정부 차원의 민간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 지역사회, 교육훈련기관, 학교의 학생인권정책을 평가하는 메니페스토 운동을 조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교육과 치유를 위해서 지역 교육청 및 시군구 지자체 단위의 치유시설 및 대안교육기관을 설치하겠습니다.
- 마을공동체의 복원을 위해서 주5일제에 따른 지역사회 학습망을 구축하고 청소년의 여가 및 활동 시설을 늘리겠습니다.

■ 법제도 개선

■ 예산계획 (단위 : 억원) 공약 : 학생인권의 법적 보장 강화  
와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



## 제안 4

### 학생인권법 제정

학생이 인권을 존중받으면서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법을 익힐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겠습니다.

#### ■ 추진 배경

- 통제와 처벌 중심의 학생생활규정, 비민주적인 학교운영, 체벌, 용의복장 단속, 강제학습, 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 등으로 학생인권이 침해되고 교사와 학생이 대리전을 치르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학생이 인권을 존중받으면서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익힐 수 있을 때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신뢰도 형성될 수 있고, 학교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배움터로 기능할 수 있다.
- 경기, 광주,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그 밖의 지역에서는 조례 제정 가능성이 불투명하거나 가로막혀 있어 학생인권 수준의 지역별 편차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학생인권조례가 이미 제정된 경기, 광주, 서울의 경우에도 상위법과의 충돌 여부를 둘러싼 해석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학생인권 보장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 학생인권 보장은 교육청과 학교 단위의 노력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입법적·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사회 각 부분의 협력 네트워크 형성이 함께 이루어질 때 실현될 수 있다.

#### ■ 공약 내용

- 학생인권의 법적 보장 수준을 구체화·실질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을 정비하겠습니다.
- 학생인권 기준 명시, 교육당국의 책무 조항 명시, 학생자치권 강화,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 학교장의 학칙 제정권 행사의 법적 요건 강화, 학생징계권 남용 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겠습니다.

-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이 강화되고 교원의 인권 감수성과 전문성이 신장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 교원 양성·연수 과정 개편, 인권교육지원센터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소수자 학생이 학교 안에서 경험하는 육체적·정신적·경제적·문화적 어려움을 파악하여 모든 학생이 평등한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정책과 차별 해소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 전통적 의미의 ‘교권’에서 변화된 시대 환경에 맞는 ‘교권’ 개념을 재정립하는 한편, 교사의 생활교육 전문성 향상, 업무부담 감소, 교사의 휴식과 회복 등을 지원할 입법적·행정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학생과 교사, 직원(비정규직 포함) 등 학교안 구성들끼리의 상호 인권 존중 방안을 마련하고,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교육주체, 지역사회 등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겠습니다.
- 학생 신분이 아닌 탈학교 청소년의 학습권과 인권을 지원하는 한편,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기관, 일터 등 지역사회 전반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인권과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어린이·청소년 인권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별첨 자료 1



19대 총선/교육 공약 발표

“공교육만으로 대학 가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핵심 3대 과제 + 13개 핵심공약

과제 I : 국립대학 중심체제로 전환 - 학벌사회 해체

공약 1 - 국립대통합네트워크 구축

공약 2 - 직업교육 업그레이드/ 폴리테크닉 체제로 전환

공약 3 -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공약 4 - 대학입학 자격고사제 실시

과제 II : 반값등록금/고등학교 의무교육 - 교육비 축소

공약 5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공약 6 - 반값등록금법 제정 - 19대 국회 최우선 법안

공약 7 -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확대

과제 III : 특목고 해체 - 공교육 정상화

공약 8 - 특목고/자사고 일반고로 전환

공약 9 - 일제고사 폐지/ 교육과정 전면 개정

공약10 -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교육의 질 함양

공약11 - 학교자치 실시

공약12 - 교원평가-성과급 폐기/ 교육-행정업무 분리

공약13 - 학교회계직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전환

### 국가 예산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지난해 ‘반값등록금’ 시위가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과도한 등록금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진 대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MB의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놀란 정부와 여론은 대학을 압박하여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였지만 올해 전국 대학 등록금 인하폭은 평균 5%도 채 안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는 등록금 인하에 인식하고 자기 의무에 소홀한 대학들의 책임이 큼니다. 그동안 사립대학은 사기업처럼 등록금 장사를 통해 학교를 운영하고 적립금 축적에 열을 올렸습니다. 수천억씩 쌓여있는 대학 적립금은 모두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입니다.

하지만 대학의 탐욕과 함께 그동안 대학에 대한 투자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역대 정부의 책임 또한 엄중히 따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모든 교육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국내 고등교육에서 사립대학의 비율은 재학생 기준으로 약 80%에 달합니다. OECD 평균 15%와 비교하면 대한민국은 사립대에 너무 많은 의존을 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사립대학 재정에서 정부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도 고작 13.1%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적습니다. 낮은 정부 지원은 대학경쟁력을 위한 기본전제인 교육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주며 과도한 등록금 의존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입니다. 대학등록금과 고등교육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고등교육재정의 확보와 지원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통합진보당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신속한 제정으로 연간 약 12조원의 재원이 고등교육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학벌사회 타파를 위하여 대학체제의 근간을 바꾸겠습니다.

고등인력 양성을 이처럼 사립대학에게 위탁한 결과 실질적인 교육 주도권을 사립대학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위치한 소수 십여 개의 사립대학은 교육경쟁으로부터 나오는 막강한 입시 권력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학시스템이 존속하는 한 대한민국은 학력·학벌 사회구조를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낡고 답답한 교육환경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서 국민이 선출한 권력에 의해 통제되는 새로운 교육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통합진보당은 그 해결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사립대학 체제 중심으로 운영되는 대학구조를 국공립대학 중심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과도한 입시경쟁 없이도 대학에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인재를 뽑는 데만 사력을 다하지 말고 들어오는 문은 넓히되 제대로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대안은 국립대학에 우선적인 투자와 반값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국립대학을 묶어서 하나의 단일대학처럼 운영되는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016년 1단계까지 전체 대학생의 50%가 다니는 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고 현재의 입학전형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줄 세우기 경쟁을 통한 입학이 아니라 대학입학 자격고사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보통교육의 완성단계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대학을 입학할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면 지금과 같은 과도한 입시경쟁은 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는 비이성적인 입시경쟁과 사교육 열풍을 잠재우고 학벌사회로 대변되는 대한민국의 사회구조 체계에 일대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 **대학등록금 반값 실현/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확대하겠습니다.**

교육비 절감을 위한 대책은 즉각적이면서도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할 당면과제입니다. 이미 대학등록금과 입시를 위한 사교육비 지출규모는 저소득층은 물론이고 중산층 가정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비용을 즉시 줄여야 서민들이 살 수 있습니다.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반값등록금법’을 최우선 법안으로 통과시킬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공립대학은 즉각적인 반값등록금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법인전입금과 법정전입금 납입과 같은 사학재단의 의무를 다하는 조건으로 반값등록금 재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균등한 교육권리 확대 차원에서 사실상 진학률 100%에 육박하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의 범위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대기업 사원은 물론이고 웬만한 중소기업조차 이미 고등학교 등록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는 이런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 확대정책은 소득 격차 해소 및 보편적 복지 확대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특목고/자사고를 해체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고교다양화 300’ 공약에 따른 자율형사립고 설립 열풍이 불었습니다. 기왕에 존재하는 과도한 경쟁도 모자라 아예 전국의 모든 학생들을 경쟁의 벼랑 끝에 내모는 무모한 정책입니다. 특목고와 자사고는 아무리 포장을 해도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입시 교육기관으로 운영되는 게 사실입니다.

학력·학벌사회를 더욱 강고히 구축하는데 일조하는 특목고와 자사고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됩니다. 특목고와 자사고는 과도한 등록금으로 가계를 압박하고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경쟁을 초·중학교 시절부터 강요하는 학교입니다. 과감히 일반고로 전환시켜 이명박 정부에 의해 심각히 훼손된 고교평준화 정책을 원상회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교육개혁을 주장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개혁에 대한 철학과 방법에 대한 혼란,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땅히 따라야 할 재정투자가 병행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통합진보당은 19대 국회에서 압도적인 개혁진보진영의 승리와 단결을 통해 부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는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사회를 움죄고 있는 학력·학벌체제를 해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2012년 3월 13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유시민**

\* 첨부: 통합진보당 핵심공약 요약 및 해설자료

\* 문의 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 070-7455-3994, [yuanmo@naver.com](mailto:yuanmo@naver.com)

## I. 국립대학 중심체제로 전환 – 학벌사회 해체

### ■ 핵심공약 1

#### 국립대통합네트워크 구축

서울대를 비롯한 지방의 국공립대를 기반/ 통합전형과 통합학점, 통합학위로 운영되는 대학네트워크 구성/ 지역 거점 국립대마다 국토 균형발전과 연계된 특성화 계열을 집중 육성/ 부실사립대학의 적극적 통폐합 실시/ 총 대학정원의 80%까지 수용을 목표

### ■ 핵심공약 2

#### 직업교육 업그레이드/ 폴리테크닉 체제로 전환

서열화된 대학체제의 최하위가 아니라 정부지원 직업대학으로 개편/ 4년제 대학에서 전문대학과 중복되는 학과를 폐지하여 실질적으로 경쟁력 있는 직업교육체제 수립/ 전문대학과 폴리텍대학을 통폐합하여 폴리테크닉체제로 전환

### ■ 핵심공약 3

####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대통령 직속 독립적인 심의기구로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25명의 상임위원회와 100명의 배심원단으로 구성/ 교육의 주요 정책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결정하는 최고기구 구성

### ■ 핵심공약 4

#### 대학입학 자격고사제 실시

대학입시를 경쟁입시에서 자격입시제로 전환/ 졸업자격고사에 합격한 학생에게 국공립대학통합네트워크의 입학을 허용/ 상대평가제에서 절대평가제로 전환/ 국가수준의 획일화된 평가를 탈피하여 다양한 평가모형 도입/ 완전 자율형 사립대학은 국가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학생선발의 자율권 부여

## II. 반값등록금 실현/ 고등학교 의무교육 - 교육비 축소

### ■ 핵심공약 5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목적세를 제외한 내국세에 7%에 달하는 규모로 고등교육 재원 확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약 12조원의 재원 확보

### ■ 핵심공약 6

#### 반값등록금법 제정 - 19대 국회 최우선 법안

대학진학률 80% - 더 이상 대학운영과 고등인력 양성을 국가가 방관할 수 없음/ 국공립대학은 법 제정과 동시에 즉시 반값등록금 시행/ 사립대학은 수익용 기본재산 준칙 이수 및 법인전입금과 법정전입금의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교부금 지급/ 무분별한 대학적립금 규제

### ■ 핵심공약 7

####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확대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부터 단계적으로 실시/ 중앙 정부의 예산과 지방 정부의 교육비 부담/ 고등학교 의무교육 확대는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계층에 대한 소득 격차를 해소



### Ⅲ. 특목고 해체 - 공교육 정상화

#### ■ 핵심공약 8

##### 특목고/자사고 일반고로 전환

2013년도부터 특목고(외고, 국제고) 일반고로 전환/ 자사고 2013년부터 일반고로 전환/ 교육평준화 정책을 저해하는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정책 폐기

#### ■ 핵심공약 9

##### 일제고사 폐지/ 교육과정 전면 개정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세우는 일제고사 폐지/ 2009 교육과정 전면폐기/ 내신 성적을 절대평가제로 전환

#### ■ 핵심공약 10

#####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교육의 질 함양

학급당 학생수의 감축은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결정적요인/ 2015년까지 초등 20명, 중등 25명까지 감축/ 2020년에는 모두 20명 이하로 감축

#### ■ 핵심공약 11 ■

##### 학교자치 실시

관치중심의 교육청의 역할을 축소/ 민주적 학칙을 통한 학생권리 보장/ 교직원회, 학우보회, 학생회를 법제화/ 교장공모제 확대

#### ■ 실천공약 12

##### 교원평가-성과급 폐기/ 교육-행정업무 분리

학교 조직 체계를 교육중심으로 재편/ 교사의 전문성과는 무관한 경쟁중심의 평가체제 폐기/ 교육행정업무 전담인력 배치

#### ■ 실천공약 13

##### 학교회계직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전환

약 10만명에 달하는 학교회계직을 단계적으로 정무직공무원으로 전환/ 전환률 70%를 목표/ 국가기관부터 비정규직제도 퇴출 노력

## [13개 핵심공약 해설]

### 1.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구축

#### ▪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은 과도한 사립대 의존형 고등교육 구조: (재적 학생 수 기준 : 국공립대 22%, 사립대 78%)

#### 표) 일반대 전일제 학생 비율(%)

	한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미국	영국
국공립	22	100	86	97	93	25	90	67	
정부지원사립			1	3					100
독립형사립	78		13		7	75	10	33	

\* 출처: 2010교육통계 분석자료집

- 사실상 사립대학이 사기업이나 다름없는 성격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한 법제도 조건(사립학교법)에 의해 오랜 세월 동안 사립대는 부실·비리·부정·부패 경영과 이른바 ‘고액 등록금 장사’를 통해 학교를 운영하고 재산을 축적
- 2009년 사립대학 학교회계 수입총액 중 등록금 비중 63.6%(일반대 62.9%, 산업대 74.4%, 전문대 65.0%)/대학 설립 주체인 국가와 학교법인 부담은 각 3%에 불과/ 사립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수익률 등 법적기준치 미달/ 등록금수입이 수입총액의 50% 미만인 대학은 소수에 불과(4년제대학 16.0%, 전문대 11.9%)
- 대학교육을 사립대학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민간 재원 의존도가 OECD 평균의 4배, EU19 평균의 10배 이상.

#### ▪ 목표

- 대학서열화와 고질적인 학벌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학시스템을 구축
- 수도권 인구과밀, 학생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전국 대학 균형발전 (국토 균형발전과 연동)
- 공교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담당하는 국립대체제와 특성화된 교육을 담당하는 사립대학체제의 공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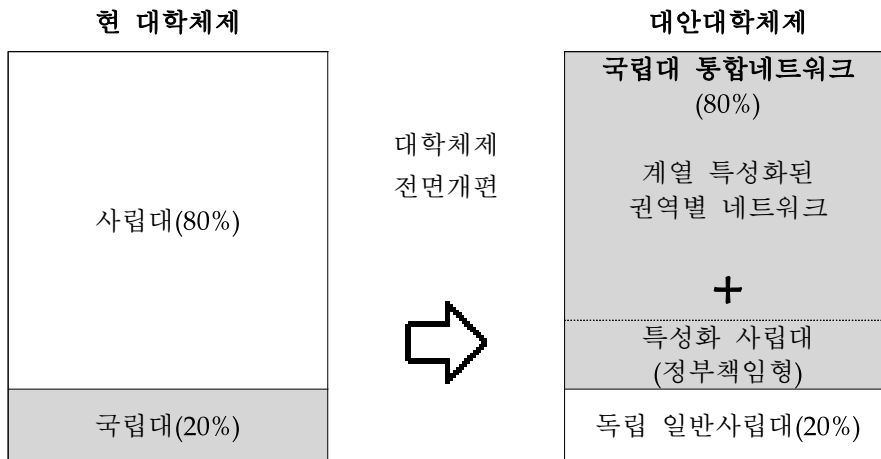
## ▪ 방법

### 1.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구축

- 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학위(이른바 '3통' 방안)로 운영되는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전면화
- 엄격한 기준으로 부실사립대를 퇴출시키고 국립대로 적극 편입: 교수, 학생, 교직원 적극 승계
- 국립대 네트워크 규모는 1단계 총 정원의 50%, 2단계 총 정원의 80%수준(정부책임형 특성화 사립대 포함)으로 확대시킴
- 학력·학벌차별금지법 등의 효과로 불필요한 대학진학이 자제되고, 출생률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국립대 정원이 천천히 늘어도 총 정원의 점유율이 급속하게 늘게 됨
- 국립대가 포괄하지 못하는 특성화 교육을 담당하는 사립대는 국가 지원
- 국립대 교과과정과 차별화되지 않는 사립대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대신 국가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시킴: 과도기 기간 동안 정부지원형 사립대 유지
- GDP대비 교육재정확대와 사립대 지원금의 국립대 전환을 통해 국립대 무상교육 지향

### 2. 지역 거점 국립대마다 특성화 계열 집중 육성

-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시행 후에도 남아 있을 캠퍼스 별 서열체계를 제거하기 위해 각 지역 거점별로 특정 계열을 집중 육성시킴
- 각 지역의 집중육성 계열로의 인적·물적 자원의 집중은 질 높은 교육환경을 보장하고 연구자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보장함
- 현재 인구와 대학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지역(현 서울대)은 비인기 순수 기초학문 관련 단과계열을,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은 인기·응용학문 관련 단과계열을 집중육성 대상으로 선정함: 국토 균형발전 계획과 연계



#### ▪ 재원

-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제정, 법인전입금 확충 의무화, 사립대학에 법적 운영 경비 부담 의무화, 교육재정 확충

## 2. 직업교육 업그레이드/ 폴리테크닉 체제로 전환

#### ▪ 현황과 문제점

- 2010년도 국공립 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은 4,784명(전체 입학정원의 2.1%), 나머지 98%가 사립대학에 다님
- 사립전문대학의 연간등록금은 600만원으로 4년제 대학과 큰 차이가 없음
- 일반대학이 취업률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전문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학과를 개설하면서 직업대학으로서의 전문대학 위상 하락, 서열화된 대학체제의 최하위에 배치
- 전문대학졸업자들의 월임금의 중위값은 150만원(서울소재 일반대학 졸업자 218만원, 비서울권 소재 일반대학졸업자 180만원)

#### ▪ 목표

- 경쟁력 있는 직업교육체제 수립
- 학벌, 임금차별 없는 전문 직업 인력 육성

#### ▪ 방법

- 전문대학 국공립화, 정부지원 직업대학으로 개편
- 전문대학, 폴리텍대학 통폐합 -> 폴리테크닉(2~4년) 체제로 전환
- 4년제 대학, 전문대학과 중복되는 학과 및 전공영역 폐지, 폴리테크닉으로 이관
- 국가의 적극적 개입 통해 임금격차 축소,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 ▪ 재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전문대학정원 25만 명	2조	2조	2조

\*2011년 입학자 수는 249,693명임

\*1인당 대학등록금지원액400만원(전문대학평균등록금600만원-고등학교수준 등록금200만원)×25만 명= 1조원

\*2개 학년 지원 : 2조원

### 3.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 ▪ 현황과 문제점

- 시군구 교육청(180여개)의 명칭이 지원청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위에 군림하는 행정기관
- 권위주의와 관료주의로 대표되는 교육행정 체제를 극복해야 함. 고등교육 행정은 대학준칙주의와 대학자율화라는 명분으로 사유화시켜버림. 초중등교육행정은 중앙 집권적인 교육행정체제로 권한이 집중
- 반면, 교사(교수)-학생-학부모 등 교육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교육주체들은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
- 국가교육의 미래는 국민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고등교육의 획기적 전환을 위해서는 대교협과 전대협의 기능을 환수해야 함

#### ▪ 목표

- 전국 국립대 운영방향, 초·중등 교육과정 등을 논의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참여형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 ▪ 방법

- 국가위원회의 위상

-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심의·의결 기구
- 교육의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최고 기구
- 구성
  - 교원 (교사+교수), 학생(대학생 대표), 학부모 대표, 공익적 사회단체 추천인, 정부 추천인(교육전문가)로 상임위원회 구성(25명 구성)
  - 비례충화표집 방법을 이용한 무작위 추출을 통한 국민 배심원단 형식의 위원 선발 (100명 규모)
  - 일반위원(배심위원)은 1년에 1~2차례 소집되며, 상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최종 승인함
- 조직
  - 유초중등 위원회, 대학위원회, 평생교육위원회 + 사회적 교육과정 위원회
  - 교육청을 장학위원회와 학교지원센터로 재편

#### 4. 대학입학자격고사제 실시

- 현황과 문제점
  - 한국사회에서 대학입시는 상위서열의 대학과 인기학과 진학을 위한 경쟁의 장으로서, 초·중등교육은 이러한 입시에 종속되어 영수국 등 입시과목을 중심으로 파행적으로 운영
  - 대학입시경쟁에는 막대한 사교육비가 동반되고 있으며, 대학입시를 매개로 사회적, 교육적 불평등이 고착화

표) 연도별 총 사교육비 현황(단위 :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 사교육비	200,400	209,095	216,259	208,718
실질 총 사교육비	180,703	178,257	179,022	167,645
(사교육관련물가지수, 2005년=100)	110.9	117.3	120.8	124.5

- 목표
  - 경쟁 입시를 자격고사로 대체
  - 절대평가제로 인한 사교육 대폭 절감
- 방법
  - 대학통합네트워크' 대학을 중심으로 입학사정관제, 수준별 수능시험, 대학별본고사 폐지, 대학입학자격고사(내신포함)로 전환(대입자격시험을 통과한 학생에게 '대학통합네트워크'의 입학자격 부여)

학교단위이수		졸업자격고사
▶ 절대평가방식 확립		▶ 서술식 평가
▶ 급별, 수준별 교육목표 수립	+	▶ 후기중등교육목표 달성여부
▶ 다양한 교육과정		▶ 졸업자격과 국공립대 입학 자격의 2
▶ 다양한 평가 방법		단계 성취

#### ○ 학교단위 이수

- 국가수준의 획일화된 교육과정과 평가의 통제를 탈피하고 급별 교과별 교육목표 수립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평가 모형을 학교에 제시
- 학부모와 지역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사회 및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자율 편성
- 교사들의 평가권을 보장하며 이에 따른 교육활동의 책무성을 강화

#### ○ 졸업자격고사

- 고등학교 학생들이 보통교육의 완성단계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여 졸업할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평가
- 학생들의 상대적인 서열을 짓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목표지향적인 절대 평가
- 교과지식의 암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평가
- 신설된 국가교육위원회 산하에 독립된 졸업자격고사 관리위원회가 시행하는 평가
- 매학기별 단위이수평가를 통하여 정해진 단위를 이수하여 졸업이 가능한 이수단위를 확보했을 때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가짐
- 지필고사의 과목은 언어, 논리, 교양으로 하며, 문항은 선다형을 지양한 서술식

#### ○ 대학전형

- 통합중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통합, 계열 통합)를 졸업한 모든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수한 생활기록과 입학자격 여부를 토대로 국공립대학에 입학토록 함
- 전국의 국공립대학은 국립대학의 총 정원 내(2차 구조개편 시에는 탄력정원제 도입)에서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
- 전형자료는 학교생활기록, 입학자격, 학업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활용
- 사립대학은 학생생활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자체 선발기준에 의하여 선발: 2차 구조개편 방향에 따라 사립대에 대한 국가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일정정도 부여함

## 5.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공교육비 부담은 OECD 국가 중 최고
- 대학개혁을 이끌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

- 사립대학 운영 법인들의 공공의식 결여, 각종 법적 의무 소홀

#### ▪ 목표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내국세의 7%로 고등교육 재원 마련.
  - 국립대학 즉각 반값등록금 실현
  - 사립대학은 법인분담금 이행여부, 교원확보율, 사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준칙 등 교부금의 교부 제한 기준을 설정하여 재정 지원.

#### ▪ 재원

- 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 다른 법률에 의해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되는 조세를 제외한 내국세의 7%를 '고등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
- 사립대학에 법적 운영 경비 부담 의무화
  -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정해진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추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법적인 기준만큼 학교에 내고 있지도 않음.
  - 법정전입금 강제. 미납시 교부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적립금을 규제하며, 그 사용내역과 사용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표) 내국세 7% 와 사립대학의 법정전입금 강제 시 총액규모(단위 : 억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내국세(7%)	111,228	118,235	125,684	133,602	142,019
법정전입금	2,326	2,524	2,738	2,971	3,224
합계	113,554	120,759	128,422	136,573	145,243

## 6. 반값등록금법 제정 - 19대 국회 최우선 법안

#### ▪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공교육비 부담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 대학의 민간 부담률은 GDP 1.9% 수준으로 약 19조원, 이중 12조 원가량이 등록금



표) 재원에 따 GDP대비 공교육비율(%), 2010년 OECD 통계

	초중등 및 중등 후 비고등교육			고등교육			전체 교육단계		
	정부 재원	민간 재원	계	정부 재원	민간 재원	계	정부 재원	민간 재원	계
OECD 평균	3.3	0.3	3.6	1.0	0.5	1.5	4.8	0.9	5.7
EU19 평균	3.3	0.1	3.5	1.1	0.2	1.3	4.9	0.4	5.4
한국	3.1	0.8	4.0	0.6	1.9	2.4	4.2	2.8	7.0

▪ 목표

- 국공립대학은 즉각 반값등록금 실시
- 사립대학은 법인전입금과 법정전입금의 의무를 다 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값등록금 지원, 국공립통합네트워크 구축과 연계하여 교부금 지원

## 7.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확대

▪ 현황과 문제점

- 초중등 단계에서 민간 부담률은 GDP 0.8%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 목표

-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확대로 교육비 부담 완화

▪ 방법

- 중앙정부의 예산을 기본으로 하고 지방 정부도 일정한 교육비 지원을 담당
- 일시에 전면적인 무상 교육 실시가 어려울 경우, 정확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전면적인 무상 교육의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
- 우선순위: 초등부터(낮은 급별 우선), 학교급식비나 등록금부터(필수교육비 우선), 농어촌 지역부터(어려운 지역 우선), 전문계고부터(어려운 계층 우선) 무상 교육을 확산

## 8.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로 전환

▪ 현황과 문제점

-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공약에 따라 자율형사립고 설립(2011년 현재 전국적으로

자율형사립고 49개 서울지역에 27개교 설립)

**표) 특목고 자사고 상황 (2011년)**

구 분	서울	경기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제주	계
자사고	27	2	3	4	2	2	2		1	2		2	1		1		49
외고	6	8		1	1	2		1		1	2	2	1	1		1	27
국제고	1	1				1		1									4
과학고	3	2	1	1	1	2	1	1	1	2	1	1	1	1	1	1	22

- 특목고 특히 외고의 경우 어학영재 양성이라는 설립목적과 상관없이 입시 교육기관으로 변질, 상위서열 대학의 진학 통로 역할 수행
- 외고와 자율형사립고는 등록금 600~1,000만 원대로 교육비 부담의 원인
-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 평준화지역에 비해 전반적인 학업성취도 저하, 비선호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열패감 심화와 자존감 상실 등의 반교육적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

#### ▪ 목표

- 상위서열대학 진학의 통로로 기능하고 있는 외고와 자사고 중심의 서열화 체제에서 고교평준화체제로 복귀
- 외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 고교평준화 확대를 통하여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고, 초중학교교육과정을 정상화하며 평등하고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
- 학교를 선호-비선호학교로 구분하여 학교서열화를 낳는 학교선택제 폐지(통학거리에 따른 학교 진학)
- 지역별 학교 간 격차 해소, 고교의 균형발전 도모

#### ▪ 방법

- 2013년도부터 특목고(외고, 국제고 등)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일반고로 전환
- 2012년부터 자사고 설립을 중단하고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2013년부터 기존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

## 9. 일제고사 폐지/ 교육과정 전면 개정

#### ▪ 현황과 문제점

- 오로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상대평가제 유지: 일제고사로 초등학생까지 점수경쟁
- 과도한 학습량과 난이도. 발달단계를 무시한 주먹구구식 교육과정 편성, 교과별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을 조장하는 비민주적, 힘겨루기식 교육과정 개편 등의 문제를 전혀 해결

하지 않은 채 정치적 목적으로 강행된 2009교육과정 중단해야 함

- 주5일제 전면시행의 책임을 가정과 학교에 전가: 경제적 여건과 지역 여건에 따라 주5일제에서도 양극화 현상 우려, 현행 입시체제로 인한 주말 사교육 확대 및 학교 보충, 자율 학습 확대 등이 예상

#### ▪ 목표

- 일제고사 폐지, 국가수준 및 시도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금지
- 내신 석차 백분율을 폐지하고 절대평가제로 전환, 교사별 평가제 도입
- 선진국 수준으로 학생의 주당 수업시수 감축 및 연간 수업일수 축소
- 2009개정교육과정 폐지하고 교육과정 전면 개정

#### ▪ 방법

- 교육과정 전면개정을 위한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 구성
- 민주적 논의절차를 통해 교육과정 발전방향 수립. 과거의 교육과정과 입시에 의한 왜곡을 거울삼아 "누구나 함께 발달할 수 있는 협력교육과정, 수업시수 감축과 학습량 적정화, 수준별 반편성 금지,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권과 평가권 부여"를 기본 방향으로 함.
- 교육활동의 다양화와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여건 확충
- 학급당 인원수 감축, 교사1인당 수업시수 감축, 교육활동 중심으로 학교운영구조 전환

## 10.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교육의 질 함양

#### ▪ 현황과 문제점

-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고의 수준

<표1> 교육단계별 학급당 학생 수 단위: 명, 2009년 OECD 통계)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일반계)
한국	28.6	35.1	35.9
OECD 평균	21.4	23.7	-

- 학급당 학생 수가 많으면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익명화되며, 다양한 수업 방법을 구사할 수 없음: 학생 개개인의 성장 속도에 맞는 맞춤형 교육 불가능
- 따라서 학급당 학생 수의 감축은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조건(최근 불거지고 있는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
- 출산율 감소로 초중등 학생들의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 따라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데 매우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고 있음. 그러나 현 정부는 오히려 학급수를 줄이려 시도

▪ 목표

- 1단계 : 2015년까지 초등-20명, 중고등학교 25명으로 감축
- 2단계 : 2020년까지 모든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감축

▪ 방법

- 2015년에 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하고, 중고등학교를 25명으로 하였을 경우 약 25,000여 학급과 약 4만 4천명도의 교사가 필요함
- 학급수의 경우 현재 초중고 총 24만여 학급이기 때문에 약 10%의 학급이 늘어나는 것
- 학교를 신설하거나 기존 교실공간 규모를 축소하여 학급교실 확보

표) 2015년 증설학급수와 교원증원 예상 (단위: 명, 개)

구 분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예상인구수(2015)	2,711,536	1,523,145	1,878,317
예상취학생수(2015)	2,666,815	1,499,994	1,791,097
예상학급수(초등 20명, 중고등25명 기준)	133,340	59,999	71,643
증설학급수	9,407	1,626	13,461
증원교원수(초등: 학급수x1.5/ 중학교 학급수x1.8/고등학교 학급수x2.0)	14,111	2,928	26,923
연간 증원교사수(2013~15. 3년 평균)	4,703	976	8,974

표) 2020년 증설학급수와 교원증원 예상 (단위: 명, 개)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예상취학생수(2020)	1,301,048	1,352,920
예상학급수(20명 기준)	65,052	67,646
증설학급수	5,052	-3,997
증원교원수	9,094	-7,995

- 2020년도를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학생 수 변화 거의 없음(2015년도 수준 유지)
- 중학교는 5,000여개의 학급 수 증설과 10,000여명의 교원증원이 필요
-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급속하게 감소하여 4,000여개의 학급이 감소하고 교사정원도 8,000여명 정도가 감소(불과 2,000여명의 교사 증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 채용은 거의 필요 없음)

## 11. 학교자치 실시

### ▪ 현황과 문제점

- 여전히 한국의 학교를 지배하는 것은 관료와 사학 자본. 교육의 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는 교육정책의 결정에서부터 학교운영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대상화
-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에 교사-학부모-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독선적인 교장 권력을 견제하기에도 버거운 실정
- 자율성과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곳에 자발성과 책임성이 존재할 수 없음

### ▪ 목표

- 학생회 법제화, 민주적 학칙 통한 학생권리 보장
- 학교자치위원회 설치 -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 ▪ 방법

- 학생회 법제화, 민주적 학칙을 통한 학생권리 보장
  - 집회, 결사, 출판, 표현의 자유 보장
  -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 보장
  - 학생관련 규정에 대한 의결권 부여
  - 학생회장 선출 직선제 전면화, 학생회비 예산편성권·집행권 보장
-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 교직원회: 학교 혁신, 교육과정, 인사, 예·결산, 학교장 선출, 교육활동 등의 분야에 대한 의결권 부여
  - 학부모회: 학교운영,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감시, 평가, 견제 역할 부여
  - 학생회: 학교운영, 학칙제정, 학교복지에 대한 의결권 부여.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교무회의의 참관
-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 교장 자격 : 일정한 교직 경력을 지닌 현직 교사 (교장자격증제 폐지)
  - 선출 방식 : 교직원회의에서 복수 추천(교황식) → 교사, 학부모, 학생 대표단에서 선출 → 학교자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
  - 교장 역할 : 교직원회의의 주재, 학생회와 학부모회 지원, 학교내외의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및 관리(학교의 행정 및 재정 관리), 교원의 공동학습·연수 등 지원

## 12. 교원평가-성과급 폐기, 교육-행정업무 분리

### ▪ 현황과 문제점

- 현 정부 하에 학교평가와 교원평가가 강화되고 이를 근거로 차별적인 보상제도(교원성과

급)가 확대됨

- 경쟁만능주의와 교사의 전문성과는 관계없는 평가지표는 교육 주체 간의 불신만 초래하며 불필요한 잡무만 양상하고 있음 예)서울의 한 고등학교 - 9개월 동안 무려 6천여 건의 공문 생산

#### ▪ 목표

- 일방적 경쟁중심의 평가 폐지
- 교육-행정업무 분리

#### ▪ 방법

- 교원평가 폐지
- 교원성과급제를 폐지, 학급 담임 수당 현실화(30~50만원)
- 학교 조직 체계를 교육중심으로 재편, 교육행정업무 전담인력 배치

### 13. 학교회계직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

#### ▪ 현황과 문제점

- 학교회계직은 학교장이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형태로 고용되어 항시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 구조에 노출되어 있음
- 전국 초.중등 교육기관에 10만 명 이상의 학교회계직(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급식, 행정, 전산, 방과후, 행정보조 등의 다양한 업무로 학교운영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총 교육기관 종사자의 20%에 달함
- 학교라는 가장 공공적인 기관부터 사회적 차별의 표상인 비정규직 제도를 통해 운영된다는 것은 교육과 정의의 관점에서 타당하지 못한 것임
- 차별적 대우를 시정하기 위하여 시도 단위의 특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학교회계직을 교육현장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제도를 만들어야 함

#### ▪ 목표

- 학교회계직에 대하여 기능직 공무원으로 정규직화를 실시하여 학교 현장의 차별적 관행을 타파하여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을 차단함

#### ▪ 방법

-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즉각 폐기 -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제도가 '선진화'로 포장될 수 없으며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을 없애는 모범을 보여야 함
- 교육감이 학교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을 직접 임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예 : 법원의

경우 법원공무원규칙에 각 급 법원장이 기능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이 위임되어 있음)

- 각 시도 교육청은 학교회계직원의 근무 실태와 고용조건을 조사하고 기능직 공무원으로의 임용전환 계획과 예산을 작성하여 그 계획에 의거 단계적으로 임용전환을 실시(목표를 70%)하고 전환이 어렵거나 불필요한 부문도 임금과 복지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별첨자료 2



진보신당이 제안하는 교육 정책

#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1. **[교육과정]**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 초·중·등 교육과정을 '인간 발달'과 '협동' 중심으로 전면 개편
2. **[학제]** 모든 중, 고등학교를 하나로 통합  
: 유아 교육을 기본 학제로 포함하고 고교 서열제, 인문계고-전문계고 분립을 폐지하는 2-6-5-4(2) 학제로 개편
3. **[대학]** 입시 경쟁, 학벌 사회를 뒤엎는 대학 혁명  
: '대학통합네트워크' 설립과 '대학입학자격고사' 실시
4. **[무상교육]** 대학까지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5. **[학교자치]** 학교자치 법제화로 교육 현장 민주화
6. **[비정규직]** 각급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진보신당 교육 공약의 기본 기조>

- **‘인간 발달’과 ‘협동’의 교육 철학에 바탕** : 특정 문제들에 대한 대중 요법의 나열이 아니라 ‘인간 발달’과 ‘협동’의 교육 철학에 입각하여 교육 체계와 내용을 재편
- **교육 과정 ‘전반’의 혁명적 변화** : 교육 과정의 특정 단계만이 아니라 유아 교육에서 고등 교육(대학)에 이르는 교육 과정 전반의 혁명적 변화를 추진
- **한국 사회 교육 문제에 대한 ‘근본적, 종합적’ 처방** : 공교육 붕괴, 입시 경쟁, 사교육 과열, 등록금 폭등,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 학벌 사회 등 한국 사회의 교육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 종합적 처방을 제시
- **학교 현장의 민주화** : 교육 혁명의 현장인 각급 학교에서 직접 민주주의, 당사자 민주주의를 통해 교육 주체 간 협력에 기초한 교수-학습 공동체 건설

## <6대 핵심 공약>

1. 초중등 교육과정 전면 개편으로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 초등학교부터 경쟁과 폭력을 넘어 발달과 협동으로

### [개요]

유아 교육부터 고등 교육까지

교육 목표 / 교육 방식 / 평가 체제 / 물적 토대 등을  
‘인간 발달’과 ‘공동체적 협동’의 교육과정으로 개편

- 교육 목표 : ‘인간 발달’과 ‘공동체적 협동’의 기초(L. S. 비고츠키[Lev Semenovich Vygotsky]의 교육 철학에 입각)에 따라 유아, 초등, 중등, 고등, 성인 교육 등 각 발달 단계의 교육 목표 제시

단 계	중심 활동	중심 발달 기 능	핵심 내용과 발달 목표
유 아 초 기	정서적 교류 / 신체적 활동	말 발달	정서적 교류와 놀이를 통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기능 형성으로 자기 자신과 외부세계에 대한 통제력 획득 시작
유 아	놀이와 대상 중심적 활동	자기 규제	다양한 사물의 조작과 직접적 대상을 통한 낱말 습득 / 모국어 듣기, 말하기를 통한 의사소통 기초 형성 및 유아 학교에서의 사회 생활을 통해 기초적인 자기조절 능력 형성
초 등	학교에서의 학습 활동 (텍스트 이해와 쓰기, 산술체계 기초 습득, 연극 활동 등을 통한 기초 표현 및 노작)	자발적 주의 / 논리적 기억	모국어 문해 능력을 중심으로 기초 학습 기능의 숙달 / 다양한 기초 노작 활동 / 문화예술 활동의 기초 습득

중 등	동료와의 협동 및 자치 활동	개념적 사고 / 의지 / 구조화된 세계 관	보편적 교양 중심 / 개념적 사고 형 성 시작 / 외국어 학습 시작 / 직업 교육 시작 / 주제 학습 및 심화된 노작 활동 /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 형성 / 문화예술 활동
고 등	협동을 통한 학 문적 개념 학습 과 연구 및 노 동 능력 형성	복합적 창조성 / 비판적 사고	학문적 교양 중심 / 전문적 지식 / 직업 교육 / 노동 활동 / 비판적 사 유 능력 형성 / 문화예술 활동
성 인	협동적 노동 활 동 / 창조적 문화 활 동 / 주체적인 사회 활동 참여	협동적 의사소 통 / 관계적-과정적 사고 / 비판적 성찰	사회적 교양 중심(사회교육기관, 노 동현장 내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 / 노동 활동을 통한 학문적 지식의 구 체적 수준으로의 상승과 숙달 /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창조적 능력의 확장 / 사회 활동 참여를 통한 정치 의식의 고양 (노동조합, 정당, 사회단체 등)

- 교수학습 목표 : 학문, 지식 습득의 양적 기준이 아닌 발달 기능 중심 / 개념의 피상적 이해를 넘어서는 진개념(genuine concepts)의 형성을 통한 개념적 사고 기능 발달 / 지성, 정서, 의지의 발달을 전 교과에 공통된 지향으로 설정 (예 : 악기 연주 능력 습득은 필수로, 미적분은 선택으로)
- 교수학습 방식 : 집단적 과정과 개별적 과정의 결합 / 새로운 지식과 기능뿐만 아니라 평생 학습을 위한 도구의 역할을 하게 될 '학습하는 습관'과 학습의 중요성 및 기쁨을 경험하는 과정 (과도한 양적 부담과 상대 평가로 인한 고통이 반드시 줄어야 함)
- 평가 체제 : 발달적 평가 및 발달기록부
- 교사 : 학생 이해를 위한 관찰과 진단, 처방의 전문가이자 교육 과정 편성과 평가의 주체
-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 자율성 강화
- 영역 : 교과 영역 / 관심 특기 영역 / 자치 활동 영역
- 물적 토대 : 소인수 학급(교사 1인당 25인 이하) / 수업시수 감축 / 교과 내용 감축

- 시간 편제 : 오전 교과 활동, 오후 관심 특기나 자치. 주당 학습시간은 초등 20-25시간, 중등 기초 26시간, 중등 심화 30시간 정도 (5일제 수업 기준)
- 교과와 분화와 통합 : 초등 단계의 낮은 수준의 분화에서 시작하여 중등 단계에서 점진적 세분화와 아울러 범교과 주제 활동 결합
- 이질적 학습 집단 구성 (수준별, 능력별 집단 편성은 금지)
- 학습 결손 보충 과정 및 학습 장애, 행동 장애, 정서 장애를 포함한 특수 교육 영역에 대해 적극 지원
- 이러한 교육과정 전면 개편을 통해, 공교육 붕괴 속에서 일부 학교만 혁신학교로 지원하는 현행 방식이 아니라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만드는 교육 혁명**을 단행
- 그간 ‘핀란드형 교육’, ‘덴마크형 교육’ 등으로 단편적으로 논의되던 교육과정 혁신론을 체계적인 종합 처방으로 제시한 것
- 학교 폭력 문제의 근원도 입시 경쟁 교육에 따른 공교육 붕괴에 있는 만큼 이 공약은 **학교 폭력에 대한 교육 현장에서의 근본 처방**이기도 함

## 2. 모든 중, 고등학교를 하나로 통합

- 유아 교육을 기본 학제로 포함하고 고교 서열제를 폐지하는 2-6-5-4(2) 학제로 개편

### [개요]

2년의 의무 유아 교육 신설 /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5년의 중등 과정으로 통합 /

인문고와 전문고도 통합중등학교(모든 학교가 인문 교육 과정과 직업 교육 과정을 병행)로 통합 /

이 과정에서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을 폐지하여 고교 서열제 무효화

17	특목고	일반계	전문계			
16	자사고	고	고	일반계고	전문계고	
15						통합중등학교(5년)
14	중학교 (3년)			중학교 (3년)		
13						
12						
11	초등학교 (6년)			초등학교 (6년)		초등학교 (6년)
10						
9						
8						
7						
6						
5				유아 교육		유아 교육
4						
	현재			전환 : 1단계		전환 : 2단계

○ 유아 교육의 기본 학제 포함 :

- 만 4-5세 유아들이 다니는 유아 학교를 기본 학제에 포함
- 학부모의 양육권 보장 차원에서 의무 교육이 아닌 무상 교육으로 기본 학제에 포함
- 초등 교육과정의 선수 학습이 아니라 유아의 발달 과정에 조응하는 교육 내용
- 유아 교육 관리는 단일한 국가 기관으로 일원화 (선진국은 교육부에서 관리)

○ 중, 고등학교 전환 1단계 : 고교 서열 체제 폐지

- 입시 기관화되고 상류층 학교로 변질된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폐지
- 학교 선택제를 폐지하고 근거리 배정 제도로 전환

○ 중, 고등학교 전환 2단계 : 통합중등학교(중학교 + 고등학교 / 일반계고 + 전문계고)

-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5년의 통합중등학교로 통합

- 현재 일반계고와 전문계고로 분리된 복선형 학제를 통합중등학교의 단선형 학제로 통합 (현재의 복선형 학제는 전문계고 졸업자들을 상대적 저임금 노동자군으로 몰아넣는 효과가 있음)
- 통합중등학교에서 **보편적 교양 교육과 직업 교육을 병행**하여 종합적 인간 발달 교육으로 전환
- 건국 이래 큰 변화 없이 지속되던 6-3-3-4(2) 학제, 복선형 학제(인문계고, 전문계고 분리) 등을 최초로 혁명적으로 재편하자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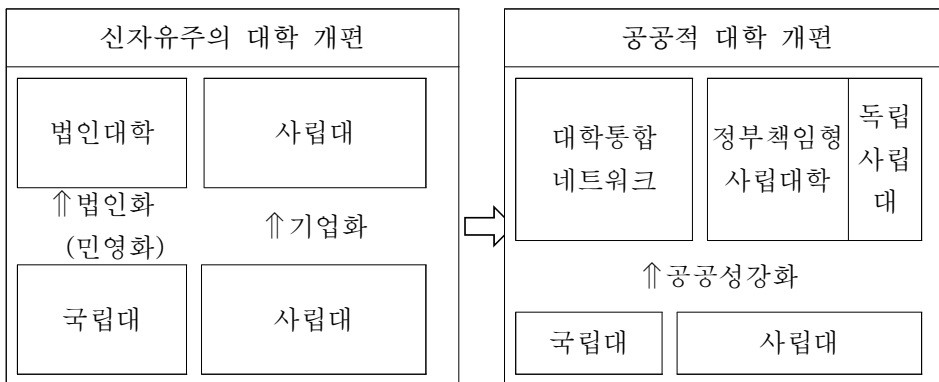
### 3. 입시 경쟁, 학벌 사회를 뒤엎는 대학 혁명

- ‘대학통합네트워크’ 설립과 ‘대학입학자격고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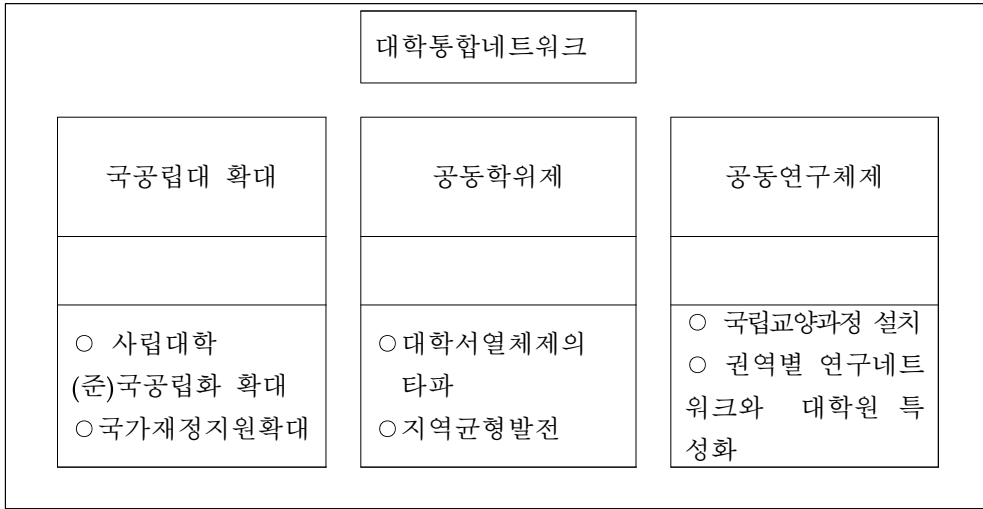
#### [개요]

국공립대를 통합하여 대학통합네트워크 설립 /  
 대학통합네트워크에서 공동 전형, 공동 학위제 실시 /  
 정부의 고등 교육 재정 지원을 통해 사립대를 대학통합네트워크에 점차 흡수 /  
 수능을 폐지하고 대학입학자격고사 실시

- 모든 국공립대를 통합한 ‘대학통합네트워크’ 설립으로 대학 교육의 공공성 강화



- 서울대를 포함한 모든 국공립대를 대학통합네트워크로 통합
- 이를 통해 국립대 법인화 등 신자유주의적 대학 개편을 중단하고 반대로 공공적 대학 체계 구축
- 대학통합네트워크 내 지방 캠퍼스에 대한 전략적인 국고 지원을 통해 수도권-지방 간 대학 서열화를 타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 마련
- 정부의 고등 교육 예산으로 지원 받는 **사립대**(정부 책임형 사립대)를 중심으로 사립대들을 점차 대학통합네트워크에 흡수(=**공공화**)
- 대학통합네트워크에서 **공동 전형, 공동 학위제**를 실시하여 입시 경쟁, 대학 서열 체제, 학벌 사회를 점차 해소
- 신입생 선발 단위는 대학별, 학과별이 아니라 전체 대학통합네트워크 총 정원으로 함 (**공동 선발**)
- 대학 입학 자격은 고교 내신 성적과 계열별 대학입학자격시험을 통해 부여 (수능 폐지 : 아래 참고)
- 대입 자격을 획득한 학생들은 먼저 1, 2, 3 지망으로 대학을 지원해 배정 받고 거주지별 배정을 원칙으로 함
- **학점 취득은 대학통합네트워크 내에서 개방**
- **교양과정** 이수 후 **전공과정**에 진학할 때 희망 학과를 지원하도록 하되, 전공별로 학위 수여 정원을 두고 정원 초과 인원에는 지속적으로 전과를 추진 (전공과정 진학 시 특정 캠퍼스에 집중도가 높을 경우 교양과정 이수성적 등을 고려하여 배정)
- 사립대를 지속적으로 대학통합네트워크에 결합시키는 방안의 일환으로 교양과정에서 전공과정으로 진학 시 일정 비율을 상호 개방
- 대학통합네트워크의 모든 졸업생에게 전공이 표시된 동일한 **공동 학위**를 수여하여 대학 서열 체제를 해소
- 대학통합네트워크는 **대학 자치의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
- **일반대학원**은 학부과정의 성적을 중심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되, 구체적인 전형방법은 학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 **전문대학원**은 지역균형인재등용제도의 취지에 따라 동일 학구의 학부 출신에게 우선권을 부여



- 수능을 폐지하고 ‘대학입학자격고사’ 실시
- 대학통합네트워크 내 대학들의 경우는 입학사정관계, 수준별 수능, 대학별 본고사를 폐지
- 대학입학자격고사를 통과한 학생들에게 대학통합네트워크의 입학 자격 부여 (전기 모집)
- 대학통합네트워크 바깥의 사립대의 경우는 내신 성적과 대학별 고사 등을 통해 자율 선발할 수 있도록 하되, 입시 공정성 여부에 대한 국가의 지도 감독을 강화 (후기 모집)

#### <대학통합네트워크의 대학입학자격고사 기본 유형>

- ① 대입자격고사(논술형)의 통과 여부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  
: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 ② 고교 내신 성적(절대평가)의 도달 여부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  
: 고교 평준화체제가 정착되고 고등학교 내 평가 체제의 객관성이 담보될 경우 실시할 수 있는 방안
- ③ 고교 내신 성적과 대입자격시험 두 가지 모두의 통과 여부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  
: 독일의 아비투어



### <과도적 방안>

- ① 고교 내신과 대학입학자격시험(객관식 시험)을 일정 비율로 반영, 합산하여, 입학기준점수의 통과 여부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
- ② 고교 내신 성적으로 일정 비율(예를 들어 70%)을 선발하고(내신 전형), 대학입학자격고사로 일정 비율(예를 들어 30%)을 선발(대입 자격고사 전형)하는 것을 병행하는 방안

## 4. 대학까지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 [개요]

초중등 교육은 전면적 무상 교육 /  
 대학은 국고 지원을 통해 반값 등록금 실현 /  
 반값 등록금을 위해 정부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  
 립대를 준공립화(대학통합네트워킹에 흡수)

-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 가계 교육비 부담은 현재 총 **7조 5천억** 원 규모로서, 그 구성은 다음과 같음.

	내용	총액 (2008년 기준)	비고
초등 학교 (사립 제외)	학교급식비	약 9천억원	2008년에는 절반 가까이가 급식비로 추산되나, 최근에는 무상급식이 확산되면서 학부모 부담이 축소되고
	방과후 교육활동비, 현장학습비, 학생수련활동비, 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 등	약 9천억원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반대로 방과후 활동 등이 확대됨에 따라 이 분야의 비용은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됨
	계	1조 8천~9천억	
중학 교	학교운영비	약 3천억	2011년 현재 강원, 경기, 경남, 전북, 광주,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 학교 운영비 징수(약 3천 억정도)하고 있으나 2012년부터 폐지 예정
	학교급식비	약 9천억원	
	방과후 교육활동비 현장학습비, 학생수련활동비, 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 등	약 3천억	
	계	1조 5천억	
고등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약 2조	
	학교운영비	약 5,500억	
	학교급식비	약9천억	
	방과후 교육활동비 현장학습비, 학생수련활동비, 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 등	약5,500억	
	계	약 4조	
총계		약 7조5천억	

○ 대학 등록금의 가계 부담은 1인당 GDP 대비, 국공립대의 경우는 세계 최고이며 사립대의 경우는 미국에 이어 2위임

세계 각국 대학등록금 수준 비교(2006~2007)

(단위: PPP US dollar 환산액)

구분	1인당 GDP(A)	대학등록금(B)		비율(B/A)	
		국공립대	사립대	국공립대	사립대
한국	18,341	4,717	8,519	25.7	46.4
미국	44,155	5,943	21,979	13.5	49.8
일본	38,440	4,432	6,935	11.5	18.0
캐나다	37,440	3,693	-	9.9	-
호주	37,434	4,035	7,902	10.8	21.1
이탈리아	31,496	1,195	4,355	3.8	13.8

\* 1인당 GDP는 2006년 기준임

출처: OECD(2010), Education at a Glance 2010: OECD Indicator

○ 초·중·등 교육에서는 즉각 전면 무상 교육 실시

- 필수 교육비인 학교급식비, 중·고등학교 학교운영비, 고등학교 수업료 등을 무상화할 뿐만 아니라
- 선택적 교육비(사실상은 필수 교육비에 가까움)인 방과후 교육비, 수학 여행 및 체험활동비, 앨범비 등도 무상화
- ※ 시행 과정에서 급별(초·중·부·터), 지역별로 단계적 시행 로드맵을 밝을 수는 있음

○ 대학은 1단계로 반값 등록금 실현, 이후 대학통합네트워크(국공립)부터 단계적으로 등록금 폐지(대학 교육 무상화)

- 국공립대는 즉각 반값 등록금을 실시하고 사립대는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통해 이를 실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사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법인 전입금 확충 의무화, 사립대 적립금 규제 등을 실시
- 2011년 기준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려면, 5조 7천억원 정도가 필요하며, 이것은 현 재정 규모에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
- 대학통합네트워크 설립 이후에는 대학통합네트워크부터 등록금을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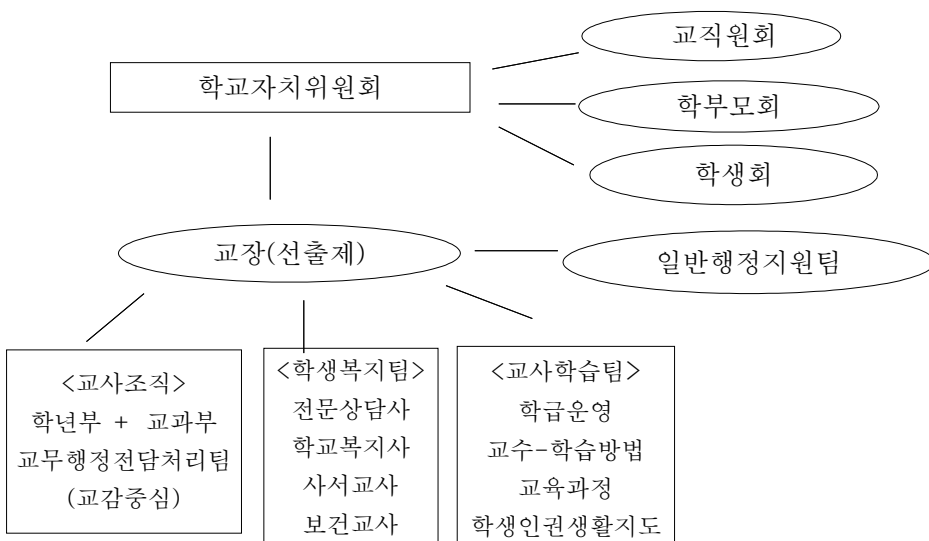
○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공공 재원을 지원받는 사립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하며 이를 통해 **준공립화**(대학통합네트워크에 흡수)

## 5. 학교자치 법제화로 교육 현장 민주화

### [개요]

학교자치위원회 법제화로 초, 중, 고등학교 민주화 /  
대학평의회 건설 및 국공립대로의 확대로 고등 교육 민주화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로 교육 행정 민주화

- 초, 중, 고등학교에 **학교자치위원회** 설치 법제화
-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법제화하고 이들 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학교자치위원회를 설치
- 학교자치위원회는 학교 내 최고 의결 기구



- 학교자치위원회 산하 단체의 역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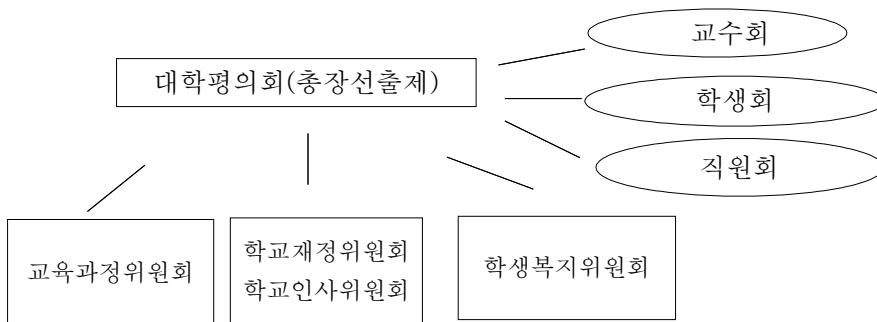
- ① 교직원회 : 교육 과정 / 교원 인사 / 예, 결산 / 학사 일정 / 학교 혁신 / 학칙 개정 등
- ② 학부모회 : 학교 운영 및 교육 활동 전반에 대한 감시, 평가, 견제의 역할
- ③ 학생회 : 학칙 제, 개정 참여 / 학생회의 민주적 구성과 운영, 학생 복지, 학교자치위원회 참여 / 교직원회의 참관 및 의견 개진

○ 초, 중, 고등학교 **교장 선출제** 실시

- 교장 자격 : 일정한 교직 경력을 지닌 현직 교사 (교장자격증제 폐지)
- 선출 방식 : 교직원회의에서 복수 추천(교황식) → 교사, 학부모, 학생 대표 단에서 선출 → 학교자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
- 교장의 역할 : 교직원회의 주재 / 학생회와 학부모회 지원 / 학교 내외의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 및 관리(학교의 행정 및 재정 관리) / 교원의 공동 학습, 연수 등 지원

○ 사립대 **대학평의회** 권한 강화 및 대학평의회의 국공립대로의 확대

-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립대의 대학평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주된 원인은 이사회의 과도한 권한에 있으므로 사립학교법 추가 개정으로 **이사회 권한은 축소하고 대학평의회가 학교 운영 권한을 갖게 함**
- 국공립대도 대학평의회 설치를 의무화



○ 교육 주체들이 참여해 국가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법정 독립 기구로서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국가교육위원회법 제정)

-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 : 국가 주요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입안, 심의, 결정

-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 : 교원(교사 + 교수) / 학생(대학생 대표) / 학부모 대표 / 공익적 사회단체 추천인 / 정부 추천인(교육 전문가)
-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 : 유초중등위원회 / 대학위원회 / 평생교육위원회 + 사회적 교육과정 위원회
- 이에 따른 **교육과학부의 재편** :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책을 수립하면 그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는 기관으로 위상을 조정

## 6. 각급 학교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개요]

대학을 포함한 각급 학교의 비정규직(비정규 교수, 학교 회계직 등)을 정규직화

- 현재 초중등 교육기관에는 10만 명 이상의 급식, 행정, 전산, 방과후 관련 학교회계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존재하며 대학에는 7만 7천명의 비정규 교수가 존재
- **학교회계직**의 정규직화
  - 학교회계직을 **교육청 직접 고용의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
- **비정규 교수**의 정규직화
  - 연구교수 등 비정규 교수에게 **교원의 법적 지위 보장**
  - 전업 시간 강사들에 대해 장기간의 안정적 연구 프로젝트 기회를 제공하고 그 수행 과정에서 업적 등에 따라 정규직 교수로 전환하는 '**비정규 교수 철폐 5개년 계획**'을 추진
  - 비전업 시간 강사들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위의 '**5개년 계획**'에 참여할 수 있게 함

### <기타 주요 공약>

1. 전문대학을 국공립화하여 권역 단위 기술교육네트워크로 육성
2. 자사고,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여 고교 평준화 재확립 (핵심 공약 2. 참고)
3. 일제고사 폐지 (핵심 공약 1. 참고)
4. 초, 중등 교육기관 학급당 학생 수 25인 이하로 감축 (핵심 공약 1. 참고)
5. 0교시 폐지하고 등교 시간은 9시로
6. 무상 급식을 고등학교로까지 확대
7. 유아 교육 공교육화 (핵심 공약 2. 참고)
8. 교원 평가, 교원 성과급제 폐지
9. 제도교육 바깥 청소년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체계 및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습자의 학력 인정 체계 구축
10. 학력 및 학벌 차별 철폐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공직자 지역할당제 실시, 고위 공직의 학벌 독점 금지법 제정

## 별첨자료 3

### 민주통합당교육정책

2. 의무교육 무상화와 반값등록금으로 교육비를 절반 이하로 낮추겠습니다.

#### 2-1. 모두가 즐거운 점심시간! 의무교육기관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 □ 현 황

- 대한민국 「헌법」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할 것을 규정(제31조의③)
- 학교급식은 단순히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라 안전한 식재료, 올바른 식습관, 공동체와 함께하는 평등한 식생활로 심신 발달과 인격형성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공교육 기능의 하나
- 무상급식은 2009년 전국 초중고의 16% 실시에서 2011년 52.3%로 빠르게 확대
  - － 2011년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80.8%인 185개 지역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 － 학교별로는 전국 5,897개 초등학교 중 84%, 중학교 3,154교 중 25.5%, 고등학교 2,291교 중 7.9%가 무상급식 실시

##### □ 민주통합당의 약속 및 추진방안

##### < 정책목표 >

- 의무교육 보편적 무상급식으로 헌법과 교육기본법 정신 구현
- 보편적 무상급식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권과 인권보호
-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농촌도 살리기



-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 2013년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추진하는 시점부터 고등학교에 단계적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 친환경 식재료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 식재료비 지원
  - 지자체별 식생활교육지원조례 제정 추진 등을 통한 지역사회 연계형 ‘먹거리·식생활’ 교육 체계화
  -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농장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식재료 수급
- 추진전략 및 입법조치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이 공동으로 재정 부담
    - \* 총액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전체 소요 비용의 50%를 부담하되, 지방정부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차등지원
    - \* 지방정부 부담분은 지방교육청 50%, 지방자치단체 50% 부담
  - 19대 국회에서 「학교급식법」, 「초·중등교육법」 등을 개정하여 2013년부터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확보

## 2-2. 학비 걱정 해소, 고교무상의무교육 추진

### □ 현 황

- 우리나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사교육비 부담과 공교육비 부담이 세계 최고에 달함. 2011년 OECD 교육통계에 따른 GDP 대비 교육단계별 공교육비 구성을 보면 우리나라 민간 부담은 2.8%로 OECD 평균 0.9%의 3배

#### < GDP 대비 교육단계별 공교육비 구성(2008)>

(단위: %)

구 분	전체 교육단계			초·중등교육단계			고등교육단계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한 국	7.6	4.7	2.8	4.2	3.4	0.8	2.6	0.6	1.9
OECD평균	5.9	5.0	0.9	3.7	3.5	0.3	1.5	1.0	0.5

주: 1) 2008년도 GDP는 1,026,451,811백만원임(2007년도 975,013,000백만원 대비 5.3%p 상승).

2) GDP 대비 공교육비 산출식=(정부부담 금액+민간부담 금액)/GDP\*100

•정부부담={ (정부에서 교육기관에 직접 지출한 총액+학생/가계 지원금+민간이전금)/GDP}\*100

•민간부담={ (민간부담금(등록금 등)+기타민간 교육부담금(학교법인 등)-정부의 민간이전금)/GDP}\*100

3) ‘전체 교육단계’는 ‘초중등 및 고등교육단계’와 ‘교육행정기관’의 교육비 포함.

o 우리나라에 비해 OECD 국가들은 의무교육 기간이 길거나 무상교육 기간이 길어 교육 공공성이 강함.

– 주요 국가들의 의무무상교육 기간 : 미국(10~13년), 영국(11년), 프랑스(10년), 캐나다(10년), 호주(10~12년), 핀란드(9년이나 의무교육 후 교육도 무상), 스웨덴(유치원부터 성인교육까지 전단계 무상교육) 등

o 「헌법」 제3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교육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국가 재정 규모에 따라 무상의무교육도 확대해야 함.

o 우리나라는 2004년 중학교 의무교육 완성, 2005년부터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사업 실시, 2011년도부터 전문계고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취업률은 거의 100%에 달해 고등학교 교육과정도 의무무상교육화해야 함.

## □ 민주통합당의 약속 및 추진 방안

### < 정책목표>

국가의 경제적 수준에 맞는 보편적 무상의무교육 확대로  
교육의 공공성 확대 및 학부모 부담 경감

o 2013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연차적으로 추진

- 1차년도 도서·벽지, 2차년도 읍·면, 3차년도 전국으로 확대
- o 고교무상의무교육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등학교 무상급식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 o 중학교 학부모의 학교운영지원비 부담을 없애고 국가가 재정지원
  -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는 폐지되었으나 중학교는 의무교육임에도 학부모가 여전히 학교운영지원비 부담, 이에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 국가가 부담하도록 재정 지원
- o 추진전략 및 입법조치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을 개정

## 2-3. 반값등록금 실현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 현 황

- o 우리나라 등록금은 세계 최고로 비싼 수준
  - '09년 기준 국공립대학 등록금은 가장 비싼 미국(\$5,666)에 이어 2위(\$4,717)이고, 사립대학 등록금도 미국(\$20,517)에 이어 2위(\$8,519)(2010. OECD 교육지표, PPP 구매력평가 환율 기준).
- o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2008년 1조 2,400억 달러로 OECD 30개 국가 중 9위였지만,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9,081(21위)로 OECD 평균 \$13,717보다 훨씬 낮은 수준
- o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중 공공부문의 투자규모는 2008년 기준 GDP 대비 0.6% 수준으로 OECD 평균인 1.0%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대부분 민간부문(1.9%)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총 투자의 약 20.7%(28위)만이 공공부문에서 부담
- o 이명박 정부는 반값등록금을 공약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국가장학금을 확대했으나 이는 등록금 인하조치와 거리가 있음.

### □ 민주통합당의 약속 및 추진 방안

#### < 정책목표 >

국가 고등교육재정지원 확대로 등록금 부담 절반으로 경감

- 국가의 재정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등록금 수준을 절반으로 경감
- 반값등록금 재원은 내국세의 일정부분(8% 내외)을 재원으로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하여 안정적·지속적으로 지원
  - － 정부가 기존에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약 5조원 규모의 재정을 고등교육재정교부금 규모에 포함
-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추진함에 따라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대학등록금액 상한제’ 도입
  - － 등록금은 전국 평균 소득의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책정
- 대학별 ‘반값등록금’ 지원은 국·공·사립대학별, 전공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부금 배분 기준 결정
  - － 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사업)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지원
  - －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평가에 의한 지원 사업교부금 범위 확대
- 대학구조조정과 사립대 재정 지원을 병행 추진
  - － 비리사학, 부실대학에 대해 ‘대학 자율구조개혁 기간’ 지정 후 평가하여 국·공립대학으로 전환하거나 퇴출경로를 밟도록 함
- 반값등록금 지원에 따른 대학 책무성 강화
  - － 국가 재정이 투입되어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낮추는 만큼 대학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대학평가 강화 및 감사제도 강화
  - － 대학이 사회의 저소득계층과 취약 청소년을 위해 재능 기부와 지식 봉사 할 수 있도록 대학평가와 연계
- 추진전략 및 입법조치
  -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고등교육법」 등 개정

## 2-4. ‘등록금 후불제’ 학자금 대출제도

### □ 현황

- MB정부는 공약한 반값등록금 대신 ‘10년도부터 ‘취업후학자금상환제’(이하 ICL)를 도입하였으나 이 제도는 초기부터 많은 문제점이 지적됨.
- ICL의 주요 문제점
  - － ► 이자율이 고금리에 변동금리( ’10년 1학기 5.7%~’12년 1학기 3.9%) ► 원리금 계산에 복리 적용 ► 국고를 투입하지 않고 채권

도 장학채를 발행하여 고금리 유지 ▶ 등록금 인상률이 매년 물가상승률의 2~3배에 달하는 실정에서 실효성 있는 등록금 억제책 부재 ▶ 기존 정부보증학자금 대출 제도에 있었던 저소득계층 이차보전 제도 폐지 등

- ICL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소득 7분위 이상, 대학원생 등)은 기존의 일반상환학자금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나 ICL과 같이 취업후 상환 조건이 아니므로 취업을 못할 경우 신용유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개선 필요

<표> 학자금대출에 따른 신용유의자

구분	2007	2008	2009	2010.7	2010.12	2011.12
신용유의자수	3,785	10,250	22,142	24,910	26,097	31,363

\* 자료 : 교과부, 2012.

## □ 민주통합당의 약속 및 추진 방안

### < 정책목표 >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학자금대출제도가 갖는 각각의 장점을 살리면서 학자금 대출제도를 단순화하여 등록금 후불제 추진

-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인 ICL과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통합하여 ‘등록금 후불제’로 일원화
- 반값등록금이 추진되면 등록금 부담이 반으로 줄어 학자금대출 수요도 경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꼭’ 필요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금리를 저리로 운영
- 등록금 후불제의 주요 내용
  - 기존 ICL 제도의 장점인 졸업하고 취업후 상환제 적용
  - 타부처 정책금리 수준과 실질적 물가상승률만 반영한 3% 금리
  -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모든 소득계층이 이용, 대학원생에게도 적용
- 군복무자에게는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 MB정부가 ICL 대출을 이용하는 군복무자에게만 이자를 면제하고 일반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군복무자는 제외시키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므로 모든 군복무자에게 학자금 대출 금리 면제 추진

#### ○ 추진전략 및 입법조치

- 「한국장학재단법」,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등 개정

### 3. 공교육 강화로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대학서열화 완화로 능력사회를 열겠습니다.

#### 3-1.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

##### □ 현황

- 그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치 이념에 따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고, 급진적인 교육개혁이 추진되어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함.
  -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입시제도가 변화되어 일선학교, 학부모, 교사의 불만이 높음.
  -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념적 잣대로 교육과정과 교과서 수정, 특히 정당한 절차도 생략한 채 역사교과서 수정
- 교육 정책을 둘러싼 이념 대립,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이 첨예하여 국가 교육정책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수립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현실이 초래됨.

##### □ 민주통합당의 약속 및 추진방안

###### < 정책목표 >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여 정치 이념에 따라 급변하는 교육정책의 변화를 완충(buffering)하고 교육개혁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안 수립

-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국가인권위원회, 노사정 합의체처럼 정권에 관계없이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담론 형성과 일관성 있는 교육개혁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행정부와 입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국가상설기구로 운영
    - \* 핀란드는 어느 정당이 집권하건 교육 및 사회체제 전반에 대한 항상적인 진단과 모니터링을 토대로 10년 주기의 교육개혁을 지난 40여년 간 지속해 옴.
- '국가교육위원회'에 다양한 사회 계층 참여 보장
  - 구성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원, 학부모, 학생, 대학, 시민사회 등이 참여
  - 경제단체, 언론 등 각계 인사를 기용하여 친교육적 환경 조성
  - 위원 구성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입법조치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제정

### 3-2. 재능을 살리고 개인차를 고려하는 공교육 강화로 사교육비 경감

#### □ 현 황

- MB정부의 과도한 경쟁위주, 줄세우기 교육정책으로 공교육 황폐화 초래
  - 0교시, 우열반 편성, 심야자율보충수업, 방과후학교 위탁 허용
  - 일제고사, 성적공개 등으로 줄세우기 심각
- 2009년 OECD 학업성취도 조사에서 한국은 읽기·수학·과학 성적이 회원국 중 1~4위로 상위이나 학교 만족도는 최하위 수준
  - 학교생활 만족도를 표시하는 학생들의 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66점
- 고교생 10명 가운데 6명은 수학과 과학 시간에 교사가 가르치는 수업 내용을 60%도 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됨(한국교육개발원, 2009)
- 한편, OECD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교육비 지출 중, 민간부문 교육비 지출이 2008년 기준 GDP 대비 2.8%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임.

- 사교육비는 ‘10년 총 규모가 20조 9천억원에 달하고 만성적 고질병  
이므로 국가 교육지원 확대를 통한 공교육 강화로 점진적 해소 필요

## □ 민주통합당의 약속 및 추진방안

### < 정책목표 >

- 창의력과 융복합 지식 시대에 부합하는 학교 교육으로 전환
- 국가 교육지원 확대로 공교육을 강화하고 만성적인 사교육 문제 해소

- 혁신학교 확대를 통해 초·중등학교 교육을 창의적 교육으로 전환
  - －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를 대폭 확대하고, 이를 통해 모든 초·중등학교가 창의적 교육으로 전환하도록 유도
  - \* 혁신학교 : 배움과 돌봄 중시, 교육과정과 수업의 혁신, 교육복지 혁신, 학교운영의 자율성 및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
  - － 젊고 유능한 교장이 학교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교장 공모제 확대
- 획일화·표준화·입시위주 교육에서 탈피
  - － 전국 단위 일제교사를 폐지하고 표집조사로 전환
  - － 통합교육과정, 개별화 수업, 협력 중심의 수업 등 수업방식 혁신적 개선
  - － 0교시, 심야학습은 학생 선택권 보장
- 초중학교 사교육 대체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강화
  - ①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 제고
    - － 해당학교 및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함으로써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
    - － 방과후학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② 저소득층 자녀 100만명에 대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 － 연간 지원금 1인당 70만원으로 확대
    - \* ‘12년 기준 차상위계층 70%(60만명), 1인당 연간 지원금 48만원 지원
  - ③ EBS 수능 인터넷방송의 세밀한 수준별 강좌 운영
- 중·고등학교 진로직업체험교육 확대
  - － 학생들의 진로직업체험교육 강화를 위해 “학생들이 찾아나서는 진로 직업체험학교”를 시범 운영한 후 확대
- 공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재정을 확충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공교육 여



건 획기적으로 향상

- 입법조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제정, 「교육복지법」 제정

### 3-3.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

#### □ 현 황

- 학습복지는 학생의 학습권을 실현하는 것으로 모든 학생들이 인간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해 가는데 있어서 최적의 학습상태를 마련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여건 조성이 필수적임.
-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0년 현재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학교 30.0명, 중학교 35.3명으로 각각 OECD 평균인 21.6명과 23.9명보다 많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초등학교 24.1명, 중학교 20.2명, 고등학교 16.5명으로 OECD 평균 초등학교 16.4명, 중학교 13.7명, 고등학교 13.5명보다 많음.
- 초·중등학교의 정규교사 부족 외에도 사서교사, 상담교사,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교육관련 인력은 정규 교원 등 팽팽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커 복지-경제 선순환구조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

#### □ 민주통합당의 약속 및 추진방안

##### < 정책목표 >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학교 교육만족도를 높이고  
사교육 경감,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교육여건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는 한편,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고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교원 인력 충원
- OECD 평균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초등 20명, 중등 25명), 교사 1인당 학생수(초등 16명, 중학교 14명)를 경감하기 위해 국·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대폭 확충

-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 강화를 위해 교사 1인당 원아수 (평균 16.8명)를 OECD 국가 수준('08년 13.9명)으로 축소
- 학교폭력 경감, 학생들의 상담교육 강화를 위해 전문상담교사를 법정 정원 100% 확충
- 영양교사, 특수교사, 보건교사를 법정정원 100% 확충,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라 목표를 50%로 함(그외 실기 교사, 사서직원으로 배치)
  - \*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진흥법에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직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교여건에 맞도록 하고 사서교사는 50% 채용을 목표로 함
- 유치원교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특수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등 정규교원 약 6만명 충원
- 교사의 행정업무 최소화를 위한 행정전담인력 배치
  -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약 5천명 충원
- 입법조치
  - － 「초·중등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 제정

### 3-4. 고교서열화 폐지 및 고등학교체제 혁신

#### □ 현 황

- MB정부가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현 정부 들어 고교서열화 현상 심각
  - － MB정부의 고교다양화 300으로 고교서열화와 일반고 슬럼화 초래, 학생 선발권을 갖고 성적 우수자를 뽑는 학교가 빠르게 증가
  - \*'11년 현재 일반고 1,194개교, 과고 20교, 외교·국제고·예고는 62교 (체고 제외), 자사고 51교
- MB정부의 자사고는 실패한 정책
  - － MB정부는 자사고 100교를 공약했지만 서울 지역 자사고는 2011년과 2012년도 2년 연속 신입생 무더기 미달 사태가 발생, 추가 모집에서도 미달
  - － MB정부는 자사고 정책이 실패하자 자사고 입학전형방법에 대한 교

육감 승인을 제외하고, 자사고 전·편입학 권한을 확대

## □ 민주통합당의 약속 및 추진방안

### < 정책목표 >

사교육을 부추키는 입시준비형 고교를 정상화하여  
고교 서열화 해체, 일반고교 교육의 상향 평준화 추구

- 입시준비형 고교 정상화, 고교서열화 폐지
  - 입시준비형 자사고 폐지 : 현행 자사고 중 학생 미달로 일반학교 전환을 원하는 학교는 조속히 일반고교로 전환하고 그 외 자사고는 점진적 축소
  - 과고, 외고 등 특목고는 설립 목적에 맞도록 운영하고 이를 어기는 학교는 지정 취소
- 일반고교의 상향 평준화
  - 일반고교의 학급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우선 감축하고 일반고에 대한 예산 집중 지원
  - 일반고교는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특성화 전략 추진
  - 일반고교에 모든 인프라를 동원(교육봉사, 재능기부 등)하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교육 지원 강화
- 예·체능 종합 학교로 조기 적성 개발
  - 음악, 미술, 체육에 관심을 가진 아이들이 조기 적성 계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공립 예·체능 학교 도입
  - 예·체능계 학생들에게 부합하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운영
  - 학부모의 예·체능 사교육비 경감
- 16개 시도별 공립형 대안학교 설치, 위탁교육 학교 확대
  - 일반고교에 부적응한 학생, 위기 학생 등이 자신의 재능을 살리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공립형 대안학교를 16개 시도에 설치
  - 일반고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위탁 교육후 원하면 다시 자신의 소속 학교로 돌아 올 수 있도록 하는 위탁교육 학교 및 프로그램 확대

### 3-5. 전문계 고교 활성화로 취업률 제고

#### □ 현황

- 2010년 전문계고 졸업생 수는 156,069명으로 2000년 291,047명 대비 46% 급감하였고, 2011년 취업률은 25%로 2000년 51.4%에 비해서 26.4%가 감소되었음.
- 전문계고졸 수준(기능사 이하)의 인력에 대한 기업 구인난 문제가 발생하는 한편, 열악한 고졸 수준 일자리로 전문계고 취업률은 급감
- 2008년 MB정부가 마이스터고 육성 정책을 추진한 이후 2008-2010년 예산 지출 현황에서 보면 전체 전문계고 중에서 3%를 차지하는 마이스터고가 전체 예산의 24.4%를 사용하고 있어 마이스터고교와 전문계고교간 양극화

#### □ 민주통합당의 약속 및 추진방안

##### < 정책목표 >

- 전문계고에서 취업 경로로 갈 수 있도록 팬צל은 일자리 창출
- 전문계고 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학력주의·학벌주의 완화

##### (1) 고졸자 취업 걱정 해소

- 고졸자 취업 우대를 위해 정부·공기업 채용 확대 및 시험위주의 채용 관행 개선
  - － 채용 이후 인사관리 정착을 위해 고졸 입사 후 4년 이상 근무자는 대졸과 동등한 직위 부여
- 공기업 고졸자 채용 및 고졸자 취업 기업에 대한 행·재정지원 추진
  - － 공기업 및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 평가시 고졸자 채용 점수 반영
  - － 고졸자 취업기업에 대한 고용훈련기금 지원
  - － 고졸인턴 채용 규모 확대 및 취업시 취업지원금 상향조정

##### (2) 기업 맞춤형 전문계고 특화

- 정부부처 연계형 특성화 확대

- 정부부처 연계형 특성화 고등학교(2010년 현재 5개 부처 105개교)를 산·학·관협력형 특성화고로 개편함
- 2017년까지 매년 50여개씩 확대해 전체 전문계고교의 50%까지 확대
- o 현장실습교육 강화와 지역내 기업체와 교육 연계
  - 직업교육훈련협의회 구성 및 운영
  - 현장실습 참여업체에 금융·세제 인센티브 부여
  - 직능단체 등 경제단체 산하 ‘현장실습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 (3) 일과 대학 연계

- o 공부할 시기에 공부할 수 있도록 3년후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거점형 (전문)대학과 거점형 일반대학 진학 기회 부여
  - 재직자 특별전형을 할 수 있는 거점형 (전문)대학 확대
  -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다니는 직원이 있는 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o 입법조치: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

## 3-6.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확대

### □ 현 황

- o MB정부의 특권화된 고교서열화 정책으로 계층 양극화가 더 크게 벌어지고 있어 교육대물림 심각
  - 자사고 학비 1천만원, 국제학교의 연간 학비가 3천만원~4천만원에 달함.
- o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계층의 월평균 교육비는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계층의 6.3배로 조사되어 2003년 4.9배에서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짐.
  - 학원 사교육비의 계층별 격차는 2003년 6.04배에서 2010년 무려 8.11배

## □ 민주통합당의 약속 및 추진방안

### < 정책목표 >

도시, 농촌의 저소득 계층 자녀에 대한 교육안전망 구축으로  
부의 대물림 해소

- 도시 저소득층 자녀 밀집 지역 및 학교 지원
  - 도시 저소득층 자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혹은 학교에 대해 교육·문화·복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확대
  - ‘12년 1,733개 학교가 지원받고 있어 이를 전체 초·중·고의 20%까지 확대
- 도시 저소득계층 학생에게 맞춤형 복지 지원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학교’로 선정되지 않는 학교의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지역교육청이 2~3개 학교의 학생들을 묶어 종합적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맞는 교육복지 모형 개발
  - 지역교육청이 주관, 지역사회 연계
- 국가가 교육격차 지표를 통해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한 「교육기본법」 제정
  - 교육격차 지표를 개발하여 매년 조사·발표 후 교육격차가 심한 지역에 대해 집중 지원
  - 취약 학생 발굴, 진단, 처방과 문제해결(지역사회 협력), 후속 지원·관리 등을 위해 학교내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내용 포함
- 저소득계층 자녀에게 지원되는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의 지원 규모 확대
  - ‘12년 전체 초·중고 학생 수 60만명 지원을 100만명에게 확대
  - ‘12년 기준 지원 단가 48만원을 70만원까지 확대
- 농어촌 저소득계층 자녀를 위한 농어촌 교육 투자 확대
  - 농어촌 학생 특별 정원 확대
  - 농어촌 혁신학교 및 자율학교 추진
  - 농어촌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확대
  -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특화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원
  - 농어촌 학교의 문화예술체육교육 활동을 위한 민간-지역 협력체제 구축
  - 통학버스 운영 확대 및 농어촌 학교 기숙사 현대화

○ 입법조치

- 국가의 교육복지 책임을 명시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
- 교육격차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법」 혹은 「교육격차해소를위한법」 제정 및 지원
- 「농산어촌학교육진흥특별법」 제정

### 3-7.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기본 학습권 보장

#### □ 현 황

- 초·중·고등학교에 학습부진 학생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교육적 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상급학년이나 상급학교로 진학하여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 발생
- 이명박 정부는 학습부진학생에 대해 학습부진이 발생한 배경과 환경에 대한 접근과 지원보다는 성적을 올리기에 중점을 두면서 학력향상 중심으로 학교 운영

#### □ 민주통합당의 약속 및 추진방안

##### < 정책목표 >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학습결손에 대한 조기 예방·치유를 통해  
최저학력 보장과 출발점 평등 구현

- ‘최저 학력 보장제’ 실시로 출발점 평등 구현
  - 학교 수업에서 방치되고 있는 학생에 대한 공적 보호 강화
  - 좋은 학교의 모델을 ‘입시명문고 패러다임’에서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돌봄-배려 학교 패러다임’으로 전환
  - 취학전, 초등, 중학교, 고교생 등에 대한 최저학력 보장을 실질화하는 『최저학력보장제법』 혹은 『교육복지법』 제정
-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에 ‘학습클리닉종합센터’ 설치
  - 교사, 학습전문가, 상담전문가, 미술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학습클리닉종합센터 설치
  -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지원

- 학교가 일정기간 이상 기초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을 선정할 경우 이들 학생은 기본학습권을 청구토록 하고 지역교육청 ‘학습클리닉 종합센터’에서 지도·관리
  - － 지역교육청에 설치한 학습클리닉종합센터에서 학습상담 및 클리닉
  - － 학습클리닉을 받은 학생에 대해 학습개선 프로그램 제공
  - － 학교 내 또는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 무료 제공
- 학습부진학생이 많은 학교에는 ‘맞춤형 클리닉’ 수업 운영
  - －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습이 뒤쳐진 학생들에게 방과후학교 운영
  - － 학습부진학생이 많은 학교에 대해 학습부진전담강사 배치, 정규수업 시에는 정교사와 보조교사 2인이 함께 수업 지도하는 협력교실 운영
- 입법조치: 「최저학력보장제법」 혹은 「교육복지법」 제정

### 3-8. 대학입학 기회균형선발제 확대

#### □ 현 황

- 한국사회에서 대입은 상위 서열의 대학과 인기학과 진학을 위한 경쟁과 각축의 장이 되어 왔음.
- 초·중등교육은 이러한 입시에 종속되어 국영수 등 입시과목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고 MB정부의 교육과정 개편으로 국영수 과목 비중은 더욱 확대되어 고교 교육과정이 대입 위주로 운영, 교육의 수단화·기형화 초래
- MB정부는 대입자율화라는 이름으로 입학사정관제를 전면 확대해 왔고, 수능시험을 국영수 위주의 수준별 수능체제로 개편함으로써 대학 서열체제 고착화
- 2012학년도 국가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위권 대학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35~44%가 10분위(소득 상위 10%, 월평균 가구소득 923만원)에 속하는 최고소득층 자녀들로 부의 대물림이 뚜렷하게 드러남.

#### □ 민주통합당의 약속 및 추진방안

##### < 정책목표 >

모든 계층의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균등한 대학 입학 기회를



##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사회적 통합력 제고 및 부의 대물림 완화

- 대학 입학 기회균형선발제 확대
  - － 농어촌 학생, 전문계고교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등에 대한 기회균형선발제(정원외 특별전형 포함) 확대
  - － 입학사정관제가 기회균형선발전형이 될 수 있도록 운영
- 반값등록금에 따른 고등교육재정 지원과 사립대 기회균형선발제 연계
  - －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대학에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함과 동시에 사립대학이 대학 입학 기회균형선발제를 확대하도록 인센티브 지원
- 기회균형선발제로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 입학후 학습결손프로그램 등 지원프로그램 실시
- 지역 우수 인재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대학육성지원법』을 제정하여 세계적으로 특성화된 지방대학 육성
- 입법조치 : 「지방대학육성지원법」 제정

### 3-9.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 □ 현 황

- 2011년도 학교 폭력 심의 건수는 총 7,823건으로 가해 학생 수는 19,949명이고 피해 학생 수는 13,745명이나 미신고·미심의 건수를 고려한다면 실제 학교폭력 발생건수나 피해학생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
  - － 학교폭력 심의 건수 중 중학교 폭력은 5,376건으로 전체 학교폭력 심의 건수의 68.7%로 압도적이고 피해학생 수도 1만 363명으로 전체 피해 학생 1만 3,748명의 75.4% 해당
- 학교 폭력 피해 건수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 보호조치에서 상담조언이 76%에 달하고 전학 권고는 겨우 23명으로 0.5%에 불과
  - － 상담조언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전문상담 인력은 절대 부족
  - － 피해학생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전학 권고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청소년상담원이 펴낸 ‘2010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친구 폭행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중학교 2학년이 제일 높았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순으로 나타남.

## □ 민주통합당의 약속 및 추진방안

### < 정책목표 >

- 과도한 경쟁교육을 완화하여 교육공동체 회복
-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 학교폭력 발생시 가해자 엄중처벌,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 MB정부의 정글식 경쟁교육을 인성교육, 협력교육으로 방향 전환
  - － 인성교육 강화,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교육, 교육공동체 회복
  - － 조기교육 조기개입으로 심각한 폭력예방
- ‘학생 책임상담’ 강화로 학교폭력 예방 강화
  - －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상담인력 배치
  - －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의 ‘학생 책임상담’ 실시
  - － 담임교사와 상담교사가 학기별 1회 이상 상담을 실시
  - － 담임교사의 상담시간을 수업일수에 반영하여 업무경감을 통한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
  - － 상담매뉴얼 및 프로그램을 만들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상담 실시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공동체 강화
  - － 교사와 학생간 신뢰, 관심, 애착형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학교 교육공동체 회복, 친밀관계 형성으로 학교문화 개선
  - － 학교 공동체 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시범학교 지정 및 지원 후 확대
-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 － 학교폭력 피해 학생 요청시 교장은 긴급조치를 취하고 피해 학생 측이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 청구권’ 보장
  - － 피해학생의 치료비용을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범죄피해자기금’에서 우선 지원하고 가해 학부모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
  - － 피해학생이 요청시 원하는 곳으로의 신속한 전학조치
  - － 피해학생에 대해 ‘교육후견인’제도 우선 도입

○ 학교폭력 가해학생 엄중 처벌

- 학교 일진에 대해 경찰 수사 조사
- 학교 상담교사가 학교폭력 가해자 및 가해 집단 학생들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 학교 폭력 피해자 요청 시 가해자와 가해 집단 전학조치
- 학교 폭력 피해학생 부모 요청 시 경찰 수사

○ ‘두번째 기회를 주는 학교’를 통해 피해자 회복, 가해자 치유 교육 시스템 강화

- 피해 및 가해 정도에 따른 지원 및 촘촘한 재교육 시스템 구축
- 전국에 3곳인 wee school을 전국 16개 시도에 중, 소규모 기숙학교로 신설
- 기존 wee class, wee center, wee school에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

○ 심각한 가해와 피해 학생 치유를 위해 ‘교육후견인’ 제도 도입

-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사를 멘토로 연결하여 지속적 심리상담 지원

○ 입법조치 : 「학교폭력예방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

### 3-10.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평생학습 진흥

#### □ 현 황

- 지식정보화사회에서 평생학습은 지역의 교육, 노동 및 고용, 복지, 나아가 인적자원개발까지 포괄하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미국 필라델피아는 대학과 도시기능을 융합하고 공공교육시설을 정비해 세계적 교육도시로 성장했고, 일본의 세타가야는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지역생태를 복원해 살기 좋은 마을 건설
- 우리나라의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은 2011년 현재 총 82개로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의 35%에 불과하여 확대 필요
-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생애능력개발 필요
  - 2008년 10월 현재 총인구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0.3%로 10년전인 1996년 6.1%에 비해 3.1배 증가

## □ 민주통합당의 약속 및 추진방안

### < 정책목표 >

지식정보화 사회에 평생학습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100세 시대 생애능력 개발을 위한 평생학습으로 배움과 일 연계 강화

- 평생학습을 위한 예산 확대
  - 정부교육예산에서 2012년 0.03%인 평생교육예산을 1%로 확충
  - \* 정부 교육예산 대비 평생교육예산은 오스트리아의 경우 약 2.3%(2004년), 아일랜드 1.96%(2008년), 중국 1.87%(2005년)
- 평생학습도시조성 사업을 2011년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35%에서 50%까지 확대
- 지방정부·지방교육청·대학·지역주민이 만드는 평생학습도시를 위해 지방정부에 ‘지역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평생교육사 배치
  -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 파트너십 형성
  -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공동체인 교육위원회, NGO, 대학 등이 협동하여 지역사회의 과제 해결을 위한 지역학연구회 결성 운영
- ‘일터-학교’로의 평생학습 순환체제가 이루어지도록 ‘평생학습중심대학’ 지정 확대
  - 지방대학이 지역기반의 지식관리시스템 중심의 기능을 하도록 평생학습중심대학을 '12년 29개에서 50개로 확대
  - 평생학습중심대학에서 운영중인 4050 은퇴세대를 위한 4050뉴스타트 프로그램 확대
- 100세 시대 대비 생애 핵심능력 개발
  - 생애 핵심능력개발을 위한 국가 차원의 법률 및 행정적 지원
  - 생애 핵심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전담 부서 설치
  - \* 영국 : 2007년 0~16세까지 생애주기의 핵심역량에 대한 유아, 초등, 중등학교의 교수학습 지원 체제를 관장하는 부서와 성인기의 시작인 대학교육과 노년기까지의 평생교육체제를 지원하는 행정부서로 개편
  - 생애능력개발시스템 도입을 위해 지역의 생애능력개발 관련 공공기관, 민간기관, 단체 각종 커뮤니티의 네트워크 구축 및 거점센터 설치

- \* 주민센터, 도서관, 고용센터, 평생 학습관 등을 묶는 거점센터 설치
- o 입법조치 : 「평생교육법」 개정

### 3-11. ‘국·공립대학 연합체제’ 구축을 통해 대학서열화 해소

#### □ 현황

- o 대학서열구조 개편에 있어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간 격차를 줄이는 문제 시급
  - 국민 여론조사 결과, 대학 서열화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서울대를 포함한 국공립대학의 통합 전형과 공동학위제 도입’에 63.1%가 찬성 (2007.10)
- o 출생지나 14세 때 거주지, 고교 소재지에 따라 대입 수능시험에서 점수차 발생, 이는 대학을 거쳐 사회에서의 임금격차로 이어지며 지방대학을 졸업한 취업자는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의 취업자보다 평균 16.4%의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됨(KDI, 2009).
- o 국립대 법인화는 대학의 공공성 훼손과 더불어 법인화 이후 등록금 인상과 기초학문 붕괴 등 국립대학의 역할을 위축시킬 것임.
- o 대학자치 구현을 위해 국공립대학의 자율운영체제 구축과 지배구조 재편 필요

#### □ 민주통합당의 약속 및 추진방안

##### < 정책목표 >

**국·공립대가 중심이 되어 대학서열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국·공립대학 운영 체제 개편**

- o 학벌사회의 폐해를 줄이고 상위권 대학에 대한 입시 열풍을 완화하기 위해 국·공립대학을 ‘국·공립대학 연합체제’(University System)로 전환
- o ‘국·공립대학 연합체제’의 구성
  - ‘국·공립대학연합운영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각 대학의 총장, 산업계 인사, 고등교육 관련 정부 부처 관계자 등이 참여

- 국립대학의 전반적인 운영과 협의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로서의 기능과 역할 수행
- ‘국·공립대학 연합체제’의 역할
  - 국·공립대학 연합체제 내에서 강의 개방, 교수 및 학점 교류를 자율화시키며, 국립대학 운영에 대한 대학자치의 근간 마련
  - 국공립대 학생선발 전형, 교수 및 학생 교류, 공동 학위, 학과 구성·운영 및 교육과정 편성 등 대학운영의 전반을 자체적으로 협의
- 서울소재 국립대학은 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학부 신입생 선발을 점차 줄여 나감.
- 입법 조치 : 「고등교육법」 개정

### 3-12. 국공립대학 비중 확대로 대학교육의 공공성 강화

#### □ 현황

- 학력인구의 급속한 감소에 따라 과도하게 과잉 공급화 되어 있는 대학의 구조개혁 필요, 반값 등록금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대학구조 개혁이 병행되어야 함.
- 국·공립대학 비중 확대의 필요성
  - 전체 대학 중 국·공립대학의 비중이 낮아 사적 부담이 과도
  - 고등교육 이수비율이 매우 높아 고등교육이 보편교육화 됨에 따라 교육비의 공적 부담이 필연적
  - 사립대학이 과다하여 고등교육 개혁에 한계가 있고 대학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임.
- \* 2010년 현재 총 3,644,158명(2년제 포함)의 대학생 중 국·공립대생은 904,989명(24.8%)에 불과, 나머지 2,739,169명(75.2%)이 사립대학에 다니고 있음.
- \* OECD 국가 평균(2007년 현재):
  - 1)전문대학: 국·공립대 67.0%, 정부의존형 사립대 20.5%, 사립대 14.1%
  - 2)4년제대학: 국·공립대 78.1%, 정부의존형 사립대 9.2%, 사립대 13.7%

## □ 민주통합당의 약속 및 추진방안

### < 정책목표 >

대학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대학의 비중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대학서열화 해소

- 전체 대학 중 국·공립대학의 비중을 확대하여 학생 수용력 획기적 증대
  - － 국·공립 학생 비중 50%까지 확대
- 부실 대학, 비리 사학을 중심으로 평가 후 (준)국·공립대학으로 전환
  - － 비리사학, 부실대학에 대해 ‘대학 자율구조개혁 기간’ 지정 후 평가하여 국·공립대학으로 전환하거나 퇴출경로를 밟도록 함
- 국·공립대학별 특성화 유도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국·공립대학 집중육성

## 토론자료 1

### ‘2012 교육운동 연석회의 교육정책 제안서’ 검토 의견문

통합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 강원모

노무현 정부 때 사학법 파동에서 경험했듯이 교육개혁을 이끌어 갈 주체가 형성되지 못하면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의 강고한 저항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2012년 총.대선을 통하여 개혁진보진영은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체제에 대한 모델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교육 부문에서 개혁진보진영이 집권할 때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명확한 상과 확신을 심어주어야만 개혁 로드맵이 선명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의제와 목표 그리고 구체적인 수단을 양대 선거과정에서 설득해나가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안문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면

- 1) 대한민국 교육 문제의 시발점은 대학서열로 조장되는 과도한 경쟁이 그 뿌리입니다. 이 과도한 경쟁을 완화시킬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이번 총선과 대선에서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고 지방대학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공약(대학통합네트워크)은 그 어떤 공약보다도 무게감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입시를 놓고 벌어지는 비이성적인 상황이 해소된다면 아마 대부분의 공약은 저절로 필요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 2) 여러 개의 공약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것보다는 해결하려는 중점과



제를 먼저 설정한 뒤 그것을 실천해줄 수 있는 수단으로써의 공약을 설명하는 것이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그래야 공약 간의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과 전문대학을 폴리테크닉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따로 떼어져서 다루기보다 하나의 묶음 즉, 대학체제 개혁이라는 큰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 속에서 같이 다뤄져야 마땅합니다.

3) 기간제 교사(대학의 시간강사 문제 포함), 학교회계직 문제 등 교육현장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를 하나의 문제의식으로 담아서 노동부문과 함께 의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 공약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대-폴리테크닉 체제로 전환하는 공약은 반값등록금 지원(년 2조)을 한다고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전문대학의 상황과 대안을 좀 더 담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5) 20개 공약과 3개의 제안 모두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들로 망라되어 있지만 공약명과 공약을 설명하는 내용이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약명은 공약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짚어주는 간결한 문장 또는 단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제시된 18개 공약을 각각 하나씩 살펴보면

1) OECD 수준의 혁신적인 학습환경 구축

- 제목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변경/ 2번공약과 통합
- 급격한 학생 수 감소에 대한 설명 필요
- 도시 학생들과 적극적 교류 검토 필요

2) 교사 1인당 학생수 감축 및 법정정원 확보

- 공약명의 괴리(공약 내용은 교원확충과 보조교사를 늘리겠다는 내용)

- 3) 참여와 협력에 의한 자율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학교자치법을 제정
  - 학교운영위원회와의 문제
  - 법 제도도 중요하지만 결국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역할이 우선
- 4) 자율성.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정책 -
- 5) 석차 없는 평가체제 구축
- 6) 국.공립 중심의 유아교육 체제 구축
  - 이미 유아보육 기관은 사립으로 대체되어 있는 현실적인 문제
- 7) 복지국가형 무상교육의 확대
  - 공약명 변경 :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실시
- 8)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
  - 자사고, 특목고를 폐지할 것인지 아님 특성화의 내용대로 변화시킬 것인지
- 9) 대학서열체제 해소와 지방대학의 균형발전
  - 대학통합네트워크의 성공 여부를 담보하는 조건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  
(예 : 서울대 문제, 통합네트워크의 유인력을 담보할 조건)
- 10) 대학입학자격고사의 실시
  - 대학통합네트워크와 연계
11. 전문대-폴리테크닉 체제로 전환
  - 전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통합네트워크와 연계
- 12) 대학의 민주적 운영
- 13) 학술 학문의 균등한 발전

14.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

- 16번과 중복

15) 학술,학문 정책의 연구 여건 조성

- 13번 공약과의 차이점

16) 대학 및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14번 공약과 중복

17) 사립학교의 부패방지 방안의 제도화

- 사학의 의무를 강제할 방법에 대한 제도 개선(수익용기본재산 확보의무, 법정부담금 강제)

18)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3개의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제안 1) 학부모 대학생의 사교육비 절감

- 과도한 경쟁을 제거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함

제안 2. 사교육비의 획기적 감소

- 제안 1과 차별성 없음

제안 3. 인권친화적인 평화로운 정책 추진

- 구체성 결여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교육개혁을 주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매년 대학입시체계를 이리저리 뜯어고치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교육개혁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좀 다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살인적인 대학등록금과 가계를 짓누르는 사교육비는 이미 저소득층은 물론 일반 중산층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런

막대한 비용을 치루고 대학을 졸업해도 제대로 된 직장은 고사하고 88만원 세대를 벗어나기 힘듭니다. 국민들 스스로 무엇인가 새로운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시장주의에 경도된 정책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명박 시대를 통해서 똑똑히 배웠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반값등록금’이라는 의제가 정치권과 언론을 압박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런 현상의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교육, 학벌·학력사회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제도,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육 대안을 제대로 준비해서 만들어야 하는 까닭입니다.